

초저출생시대 아동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방안 국회토론회

2023년 9월 18일

초저출생시대 아동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방안 국회토론회

2023년 9월 18일(월) 오전 10시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

| 주최 |  이채익 국회의원  김희재 국회의원
| 주관 |  CBS www.happyborn.kr

본 자료집은 초저출생시대 아동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방안
국회토론회 자료집으로 제작되었으며,
본 자료집의 내용은 발표자의 견해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초저출생시대
아동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방안
국회토론회**

초저출생시대 아동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방안 국회토론회

프로그램

<p>개회식 10:30~10:50</p>	<p>개회사 이채익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희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p> <p>축사 김진표 (국회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p> <p>인사말 감경철 (CTS 회장) 김진오 (CBS 사장)</p>
<p>주제발표 10:50~11:20</p>	<p>좌장 최진호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p> <p>기조발제. 초저출생시대 아동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방안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p>
<p>토론 ① 11:20~11:30</p>	<p>토론 1. 아동돌봄과 지역사회자원 활용방안 임원선 (신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p>
<p>토론 ② 11:30~11:40</p>	<p>토론 2. 우리지역 아동돌봄 사각지대 대안은? 이경은 (저출생대책국민운동 경남본부장)</p>
<p>토론 ③ 11:40~11:50</p>	<p>토론 3. 지역소멸과 아동돌봄서비스 안광현 (유원대학교 교양융합학부 교수)</p>
<p>종합토론 11:50~12:00</p>	<p>참석자 전체 Q&A</p>

초저출생시대 아동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방안 국회토론회

목차

1부	개 회 사	이채익 (국회의원, 국민의힘)	• 11
		김회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13
	축 사 ①	김진표 (국회의장)	• 15
	축 사 ②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 17
	축 사 ③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19
	인사말 ①	감경철 (CTS 회장)	• 21
	인사말 ②	김진오 (CBS 사장)	• 23
2부	좌 장	최진호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기조발제	초저출생시대 아동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방안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 27
	토 론 ①	아동돌봄과 지역사회자원 활용방안 임원선 (신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 69
	토 론 ②	우리지역 아동돌봄 사각지대 대안은? 이경은 (저출생대책국민운동 경남본부장)	• 75
	토 론 ③	지역소멸과 아동돌봄서비스 안광현 (유원대학교 교양융합학부 교수)	• 83

초저출생시대 아동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방안 국회토론회

개회사

-

축사

-

인사말

1부



개회사

이채익 국회의원, 국민의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울산 남구갑) 이채익 의원입니다.

오늘 ‘저출생시대 아동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맞벌이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저출생의 하나의 요인으로 아동 돌봄을 꼽기도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아동돌봄을 위한 정책으로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돌봄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매우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에 저와 김희재 의원이 공동 주최로 ‘저출생시대 아동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개최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CTS기독교TV 감경철 회장님, CBS기독교방송 김진오 사장님께서 공동으로 주관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초저출생시대 속에서 총체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노동인구 감소, 학령인구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의 영역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우리 군의 병력이 50만 명 밑으로 감소하여 48만명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이 소멸의 위기로 들어가는 상황을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저출생 시대를 이겨내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젊은 부부들이 돌봄의 어려움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아동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대책이 마련이 필요합니다.

모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의 돌봄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의 구축이 매우 시급하며, 오늘 토론회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제발표를 해 주실 장헌일 원장님,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최진호 교수님과 토론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패널 여러분들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입법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봉착해 있는 지역소멸, 국가소멸의 위기 앞에서 오늘 토론회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을 비춰줄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길 소망하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회사

김희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 국회의원 김희재입니다.

먼저 「초저출생시대 아동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방안 국회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님과 주관을 맡아주신 CTS 감경철 회장님, CBS 김진오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초저출생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주신 최진호 교수님과 발제를 맡아 주신 장현일 원장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이라는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가속화와 노동인구 감소의 위기가 이제는 대한민국 소멸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에 닥친 민생경제 위기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일자리,

노동, 소득, 자산, 주거, 육아, 교육, 지역 불균형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 문제가 저출생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특히 OECD 어느 국가보다 일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의 구조상 아동돌봄의 문제는 아이를 낳고 기르려는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3,495개의 읍면동 중 560개의 지역에 어린이집이 없고, 아동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초저출생의 악순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옛말에 한 아이가 태어나면 마을 구성원 모두가 그 아이를 키운다고 했습니다. 초저출생 극복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가 더 많이 지원하고, 더 실질적인 정책 입안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아동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누구나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정표가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김진표입니다.

CTS기독교TV와 CBS기독교방송국이 주관하는 <초저출생시대 아동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방안> 국회토론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주신 이채익 의원님과 김희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님, 좌장을 맡아주신 최진호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님과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초저출생시대에 진입했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통계청이 8월 30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저출생은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의료, 지방소멸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뒤얽혀 있습니다. 특히 지방소멸이 복지서비스 부족으로 이어지고 지방에

사는 국민들이 아동돌봄시설을 이용하기 힘들어지면서 다시 출산을 기피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대안적 아동 돌봄시설 구축방안에 대해 중점을 두고 논의합니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는 충분한 돌봄이 선행되어야 하는만큼 오늘 토론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모색되길 바랍니다.

21대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다양한 지혜가 도출되어 실질적인 해법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초저출생시대 아동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방안> 국회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입니다.

여름의 풍성함과 가을의 신선함이 공존하는 9월, '초저출생시대 아동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방안' 국회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토론회가 준비되기까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이채익 의원님과 김희재 의원님, 주관해주신 CTS기독교TV 감경철 회장님과 CBS기독교방송국 김진오 사장님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함께 자리해주신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7명이라는 세계 최하위 수치를 기록하며, 데이비드 콜만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로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으며, 이에 정부와 국회는 주거 및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고 가정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등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전반적인 대변혁이 요구되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행복한 일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아동돌봄시설들이 사라져 아동돌봄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위치의 신뢰할 수 있는 아동돌봄시설을 통해 아이를 편안하게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초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대안적 돌봄시설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되어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고견을 제안해주시길 기대하며,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은 오늘의 담론에 귀를 기울여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입법 및 정책적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미 있는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귀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축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초저출생 시대의 아동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방안 국회토론회 개최를 환영합니다. 행사를 준비해주신 민주당 김희재 의원님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님, CTS 감경철 회장님과 CBS 김진오 사장님,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해 2분기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 38개 국가는 물론 전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인류학자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저출생은 인구감소, 지역소멸은 물론 경기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누구나 출산을 결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있어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높여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의 과정이 온전히 부모의 책임이라는 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돌봄 시설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돌봄 종사자의 처우도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돌봄과 육아에 대한 국가와 가정의 책임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춰져 돌아갈 때, 대한민국 초저출생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출생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육아는 국가와 사회의 몫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초저출생을 극복하고, 아동 돌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풍부하게 논의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나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말

김경철 CTS기독교TV 회장

안녕하십니까.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본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CTS기독교TV 김경철 회장입니다.

가을로 접어든 9월을 맞아 국민의 뜻이 모이는 이곳 국회에서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토론회를 주최하여 주신 이채익 의원님과 김회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 의원님의 깊은 우국지심으로 인해 우리가 모여 토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 자리를 축하해주기 위해 친히 방문해주신 김진표 국회의장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국회와 양당의 수장들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에 이 자리가 크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CTS와 함께 본 행사를 주관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CBS 김진오 사장님과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국회토론회의 주제는 ‘저출생시대 아동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방안’으로 잡았습니다.

출생률과 아동돌봄 서비스 간의 깊은 연관성은 이미 많은 학자분들의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바 있습니다. 계속되는 저출생으로 인해 온 국민이 근심하고 있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은 바로 아동돌봄의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존의 돌봄시설만으로는 이 저출생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돌봄의

강화에 성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CTS는 지난 8월에 출범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조사와 토론 활동에 매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전국 각지는 물론 오지에조차 뿌리를 내리고 있는 5만 한국교회의 종교시설을 돌봄에 활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교회시설은 예배와 모임, 다음세대 교육을 위한 충분한 시설 공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예배가 없는 주중에는 그저 비어있을 뿐입니다. 이 시설들을 지금 꼭 필요한 아동 돌봄시설로 활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고급 인력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영유아 교육과 어린이 교육은 기독교인들이 맡아온 분야입니다.

그 전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도 교회에는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보육교사, 초등교사 등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기독 청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돌봄으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내자는 기독교인들의 간절한 애국심도 이제 하나의 뜻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한 ‘교회시설 내 아동돌봄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에는 현재까지 약 2,000여 교회와 20만 명의 성도가 참여했으며, 필요를 공감하시고 그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진행될 발표와 토론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될 대안적 돌봄시설의 구축방안에 대해 보다 많은 분들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 열리는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 국회토론회가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저출생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살리는 토론회가 되려면 우리 국회의 입안자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저희 토론자님들 또한 심혈을 기울인 연구결과를 들려드림으로써 의원님들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 국회토론회의 개최에 큰 기쁨과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저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김진오 CBS기독교방송 사장

저출산(저출생)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CBS 기독교방송은 출산 돌봄 국민운동을 한국교회와 협력해서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8월부터 CBS가 CTS와 함께 진행해 온 ‘저출생 극복 공동캠페인’은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CBS와 CTS 양사가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을 위한 법률개정 서명운동에 이어 오늘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안적 돌봄 시설 구축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주관하게 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의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구절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인구 문제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초저출산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대재앙 현상들이 엄청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한국교회가 나서지 않으면 일이 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예수님이 주인이신 CBS는 선교사님이 세우신 선교기관이자 언론기관으로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 방송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6월 기준 인구 감소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명 선마저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 출산율이 지난해 기록했던 0.78명보다 더 떨어져 0.6명대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면서 출산·돌봄에 적극 앞장서야 할때라고 봅니다. 아이를 낳으면 교회를 개방해 그 안에서 돌봄을 통해 저조했던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육을 함께 해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품고 이렇게 양육된 아이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성도로 자라나 부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쯏록, 오늘 ‘저출생시대 아동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내외빈 참석자들께서 계속해서 대한민국이 처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손잡아 기도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를 진심으로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저출생시대 아동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방안 국회토론회

[좌 장] **최진호**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초저출생시대 아동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방안

[기초발제]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토 론 ❶] **임원선** (신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토 론 ❷] **이경은** (저출생대책국민운동 경남본부장)

[토 론 ❸] **안광현** (유원대학교 교양융합학부 교수)

2부

[기조발제]

초저출생시대 아동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방안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행정학박사

장헌일 원장



-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기획위원장
 - (사)월드뷰티핸즈 이사장
- 대한민국 국회조찬기도회 지도위원
-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정책위원장
-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 사무총장
 - 신생명나무교회 담임목사
- 전)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
 - 전) 명지대학교 겸임교수

대한민국 국회토론회 “KF3023 선언” 정책제안서

“초저출생시대 아동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 방안”



2023.09.18 국회도서관 대강당

장 헌 일 박사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기획위원장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1. 초저출생 고령화 사회의 심화
2. 초저출생 원인과 대응 및 대책
3. 아동돌봄 인프라 붕괴와 돌봄 사각지대 확대
4. 대안적 아동돌봄시설 통한 돌봄부재 극복 방안
5. 대안적 아동돌봄 체계 구축 위한 입법청원의 필요성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2023년 기준)
0.7

어린이집 보육교사 부족으로 입소 거부

작성일 : 2023-02-13 조회수 : 33 발행부서 : 디지털

연세대학교 교수님
 저희는 변신엔 경우엔 가족중간 신음분업입니다.
 고함은 저는 역시 와이프는 광주광역시이지만
 10년넘은 시간의 후회로 직장을 잡고 거주하며 이곳에서 일용직자 여아 지난 4월엔
 사립스쿨 아이까지 가지게 되어 버린은 이제 저의 제 2의 고생이며 제 이후의 고향이 되었네요
 재가 이렇게 권리를 남기는 이유는 저출 부분은 말년에 부양입니다.
 와이프는 출산으로 인한 케어 중적 후 이제 버직을 앞두고 있어
연애이질에 입소를 시켜려고 하였으나 보육교사가 없어 연애에 입소를 시킬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작년 12월에 신당병을 는 연애는 입소 가능했나 아이를 보내도 된다고하였는데
 연애에서 교사가 없애 아이를 받기중수가 없다고 하니 당장 버직을 앞두고 창당할뿐입니다
 받고 밥질 연애대입도 부족할 뿐더러 그 해 12월은 연애대입 마저
 입소를 거부하니 저출부분은 이노라 제 주변에 같이 고향을 직장중에도 아이를
 맡길곳이없애 전전공공하는 모습을 보니 저출 부분도 곧 그렇게 될것같애 걱정이 됩니다.
 참 방법이 없으면 큰 대도시로 이주를 할수밖에 없겠지요.

나간에서 시에서 구에서 출산은 걱정을 하거나 하면 할 뿐이겠?
연애를 남애가 남애가 하면서 실상 아이를 남고 나채 후일과 제대를 생활경연가가
다 출유하지 않을것인가?
 저의 남편도 출애를 계획중이던 연애 어떻게 비침만 동애에서 대신
연애를 갖고 싶지도 남고 싶지도 않습니다.
 해당 내용 잘 검토해주시고 제출 가족이 고되고 애주권 가족들이
 아이보육에 전전공공하지 않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영국 옥스포드 인구학 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콜만 교수」는
전세계, 대한민국이 제1호 소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



「美 CA법대 조앤 윌리엄스 교수」는 여성, 노동 분야의 세계적인 학자로
대한민국이 완전 망했네요. 와~ 충격적!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0.7 인구 지진! 국가 소멸!

16년간 저출산 국가예산 280조 투입 그러나...

합계출산율 OECD 최하위(1.55), 전 세계 220국가 중 최하위

2021 데드크로스 사망자(31만7천명)수 > 출생자(26만 1천명)수
한국 저출생 계속되면 2750년 세계1호 국가소멸 위험(David Coleman)

7, 9년 후 노동인구 233(충남), 333만명(부산) 감소

경제, 교육, 국방 의료, 주택 등 사회 총체적 문제, 인구 위기 봉착
초저출산문제는 결혼, 출산 기피하는 개인문제보다 사회 총체적 복합 문제

초저출생문제 해결은 **문샷(Moonshot) 싱킹**이 답!

그 답은 (**KF3023선언 국민운동과 문샷범인의 정책 실현 - 아동돌봄**).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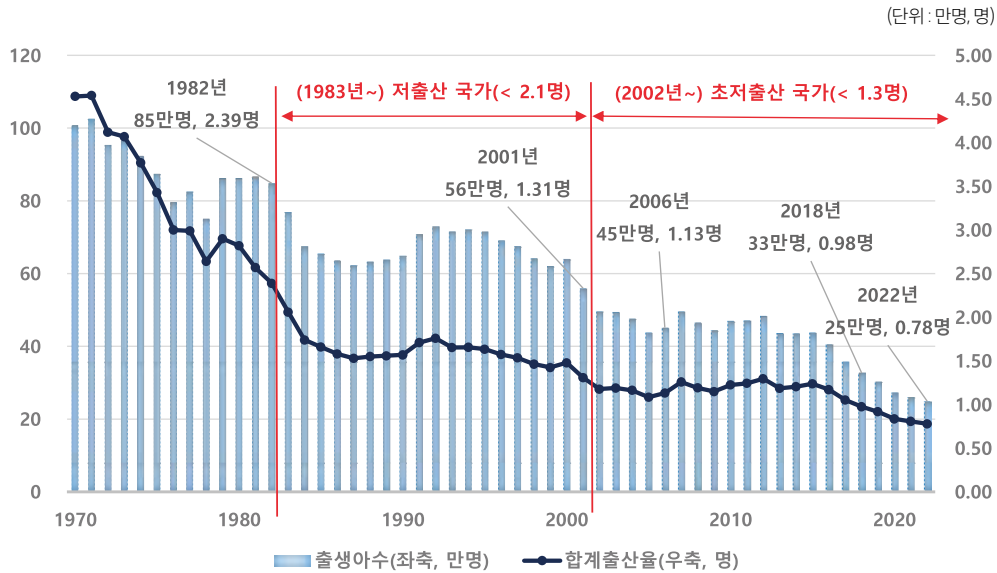
1. 초저출생과 고령화 심화

1) 저출생

- 한국은 현재 OECD국가를 포함 전 세계 220여개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력 기록 중.
-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출생아수는 24만 9천 명으로 역대 최저.
- **2023년 0.7명, 2023년 23만 3천명 최저 기록**
- 2034년 32만 6천명 정점 감소
- 2055년 10만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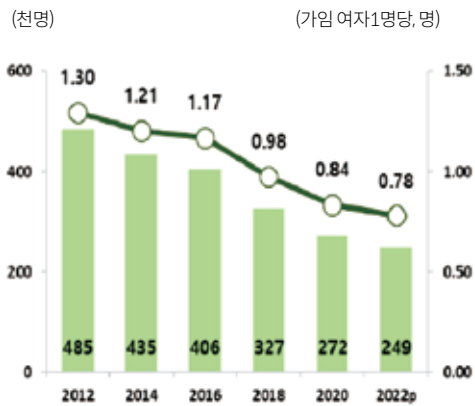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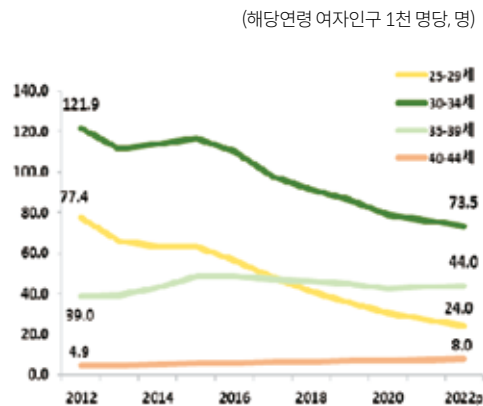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추이]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2750년 국가소멸 사실인가?
“합계출산율 0명 가능한가?”

• Easterlin (1978) 상대적 소득가설(Relative Income Hypothesis)

부부가 기대한 이상으로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유롭게 자녀들을 둘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자녀 갖기를 주저
- 출산율은 기대되는 상대적인 소득과 자원에 따라 감소되는 만큼 0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음.

• 베커의 출산력 모형

- 개인은 ‘시간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자녀양육보다 시간이 덜 소요되는 상품을 선호, 인간 모두 출산 기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Davis(1963)의 Theory of Demographic Change and Response

-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자신 생활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거나 가족규모 축소 또는 결혼 연기 통해 의무에서 탈피 선택

• Wealth-Flows Theory of Fertility

- 세대간 부의 이동으로 인해 자녀가 경제적으로 장점이 되지 못한 경우 출산율은 0까지 감소 가능

• Easterlin(1983)의 Socio-economic Theory of Fertility

- 교육, 도시화, 신상품, 신기술 등이 소득과 시간과 관련하여 자녀보다 이득이 될 경우, 자녀수요에 부정적인 영향

출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저출산문제 해결 방안 대토론회, 2023, 국회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2) 고령화

-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중.

- **고령화사회(7%)에서 고령사회(14%)를 거쳐 초고령사회(20%)로 증가
소요 연수가 스웨덴(85년, 42년)보다 한국(17년, 8년)이 8배 빠른 속도**

-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에 815만 명이었으나 2024년에 1,001만 명이 되고, 2050년에 1,900만 명까지 증가 후 감소.

- 고령화율은 2020년 15.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2025년에 20.6%**, 2030년 25.5%, 2050년 40.1%, **2070년에는 46.4%**에 이를 전망.

- 중위연령은 2020년 43.7세, **2030년 49.8세**, 2050년 57.9세, 2070년 62.2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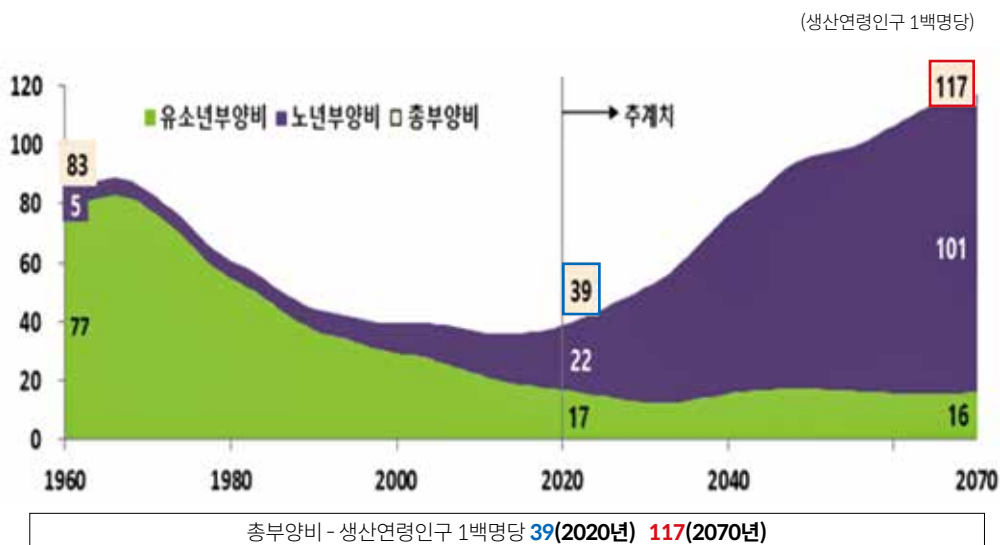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1) 고령화의 속도

	도달년도			증가 소요 년수	
	7%	14%	20%	7%→14%	14%→20%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스웨덴	1887	1972	2014	85	42
미국	1942	2015	2036	73	21
이태리	1927	1988	2006	61	18
독일	1932	1972	2009	40	37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한국	2000	2017	2025	17	8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2)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및 노년부양비, 1960-2070년(중위)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3) 인구구조와 출생아 수 변화가 주는 의미

- 초저출생, 빠른 고령화로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 2070년 3,766만 (1979년 수준)으로 축소
- 생산연령인구(15-64세) 2018년 3,765만으로 정점, 2070년 1,737만(2020년의 46.5%)으로 급감
- 1972년생 95만명 | 1982년생 85만명 | 1994년생 72만명
- 2005년생 44만명 | 2021년생 26만명 | 2022년생 24만 9천명
- 49년만에 출생아수가 거의 1/4로 감소
- 20년뒤의 청년, 대입과 노동시장의 미래는?
- 이들은 30년 뒤에 어디에서 살아갈까요? (90년생 49%, 21년생 52.4% 수도권 출생)
- 이미 결정된 오늘의 인구는 미래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은 종합적
-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법률 제도와 정책들이 인구 변동기에 제대로 작동, 기능 할 수 있을까?**
- 인구변동의 여파를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도 커지게 됨.

출처 : 대한민국 인구포럼, 2022.11.10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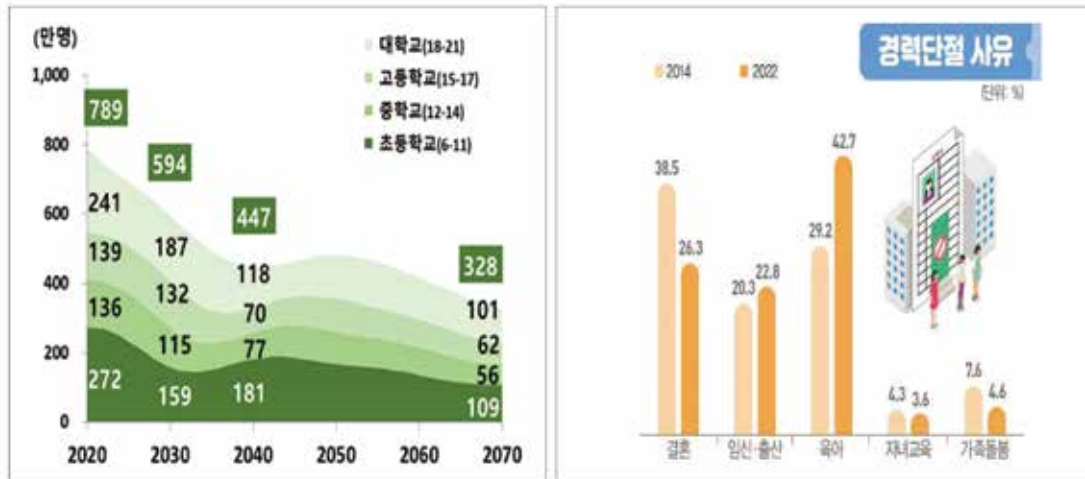
2. 초저출생 원인과 대응 및 대책

1) 초저출생의 원인

- **가치관**: 결혼자녀 필요성 약화
 - 자녀가치 하락, 기회비용 증대
- **시 간**: 일 - 가정 양립 곤란
 - 여성 사회활동 참여증가, 전통적 성역할 분담 유지, 양육의 사적 지원망 약화
- **비 용**: 양육 비용
 - 돌봄 사교육비 증가, 임신 및 출산 관련 비용 증가, 자녀 독립시기 지연
- **고용불안정, 수도권 집중화(주거문제 등), 미래 불확실성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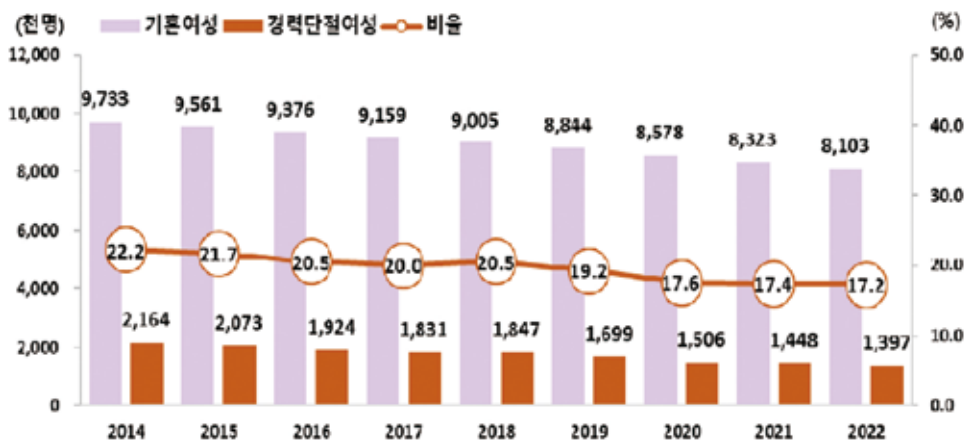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1) 학령인구 연령구조, 2020 ~ 2070년(중위)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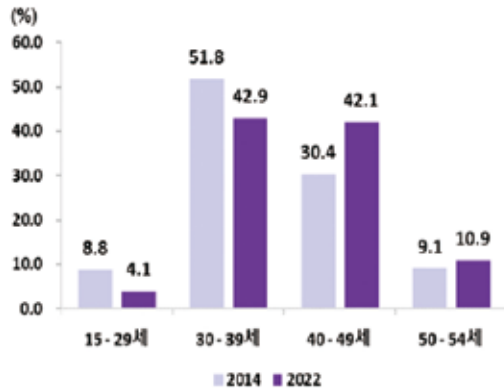
(2) 15~54세 경력단절 여성 규모 및 비율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연령대별 경력단절 여성 비율]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사유별 경력단절 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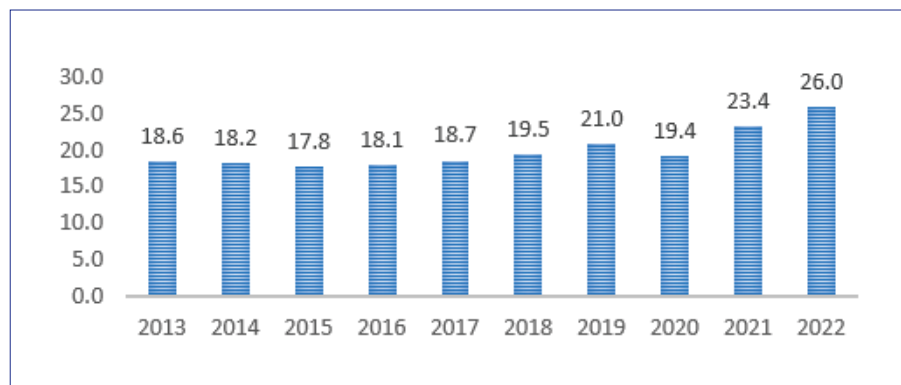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초·중·고 사교육비]

(단위:조원)



출처: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2) 초저출생의 대책

- **가치관**: 결혼자녀 필요성 - 결혼과 출산의 고귀함 사회인식 변화 시급
- **시 간**: 일 - 가정 양립 보장
 - 부모의 시간과 아동의 시간 간 사각지대 해결, 돌봄 서비스 제공시간 조정과 육아기 부모 노동시간 조정/유기적 연계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정), 육아 재택근무 등
- **비 용**: 양육 비용 지원- 돌봄의 질 제고
- **고용 안정성 보장, 미래 확실성 증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 등 저출산예산 투입의 우선순위 부여, 생애 연속적 저출생 대책과 대응 필요**(탄생-학업-사회진출) 비용 서비스 인프라 등
-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해야 결혼과 출산을 희망하는 아이낳기 좋은 나라 가능**
- **생명존중사회운동 캠페인**-생명의 고귀함과 가치를 인정하는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시급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저출산 국가와 초저출산 국가 비교]

합계출산율 2.1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저출산 현상을 중심으로 저출산 현상만 보이는 국가와 초저출산 현상까지 보이는 국가가 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요인은 성평등 수준, 다양한 삶(가족, 다문화)의 형태에 대한 수용 수준, 노동시장에서의 일·가정양립 가능성, 아동돌봄체계 확대 여부 등이다.

<아동돌봄체계에 초점을 맞추되, 사회보장제도 확대와 가족친화 노동시장이 함께 해야 함을 전제>

	저출산 국가	초저출산 국가
성평등	높은 수준 (*영미권은 기회의 평등)	강한 성별역할분리 규범 존재
가족 형태 다양성	정상규범으로서 법률혼 가족 감소	정상규범으로서 법률혼 가족
다문화성	높은 수준 (*노르딕 국가의 통제된 개방)	낮은 수준
일·가정 양립	남녀의 공통 과제로서 제도화·규범화	여성적 과제 → 고학력 여성 중심 출산 기피 전략
아동돌봄 지원	서비스와 현금급여의 조화 (*영미권은 저비용 민간 영리 중심)	▪독일어권 → 현금급여 중심 ▪남유럽권 → 가족 책임 강조
보육 인프라	공보육 중심(*영미권은 민간 영리 중심)	▪독일어권 → 민간 비영리 중심(1~2세 아동 지원 서비스 부족) ▪남유럽권 → 가족 책임 강조

• **일본이 초저출산 국가가 된 이유**

• 결혼하지 않는 청년이 빠르게 증가(1970년대 이후 70% 미혼율 증가, 2020년 생애미혼율(50세까지 결혼한적 없는 사람 비율)남성 28%, 여성 18% 한국 미혼율 증가속도 빨라 2020년 34세이하 연령 모두 미혼율이 일본보다 높다(2020년 초혼 연령 한일 남성 33.2세 31.0세 여성 30.8세 29.4세), 고용지위 불안한 남성 청년 증가. 결혼의식 변화로 여성 독박 유아 기피, 여성 고학력화와 경제활동 (1986 남녀고용기회균등법)증가, 남녀 매칭시스템의 기능저하

• **일본의 저출산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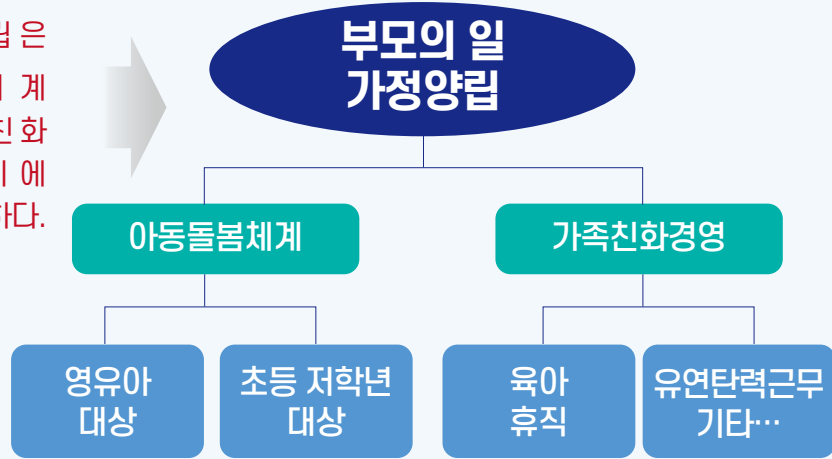
• 기존 부부 육아지원 예산이 영미, 유럽보다 작음, 사회보장제도도 고려자에 편중, 현 사회보장제도 유지만으로도 막대한 재정 적자, 청년소득을 늘리지 않는 저출생 문제 인식하지만 구체적 방안 부재.

출처 :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2020), 28쪽」을 토대로 재구성.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저출산 대응의 충분조건은 부모의 일·가정양립]

일·가정양립은
 아동돌봄체계
 구축과 가족친화
 경영이 동시에
 작동할 때 가능하다.



아동돌봄체계 { 어린이집(0~2세) + 누리과정(3~5세) + 초등돌봄체계 }
 + 육아휴직 + 유연탄력근무

출처: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저출생시대 아동돌봄 정책 국회포럼, 2023, 재구성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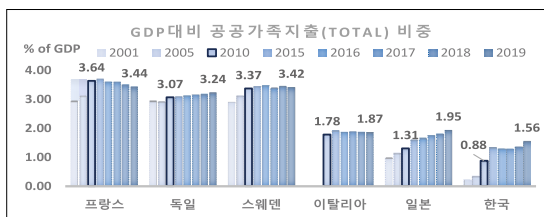
[저출산 대응 예산 추이]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예산(육아휴직, 보육지원, 아동수당, 보육 및 돌봄 지원 등 지출) 비율은 **1.56%**로 OECD 평균 2.29%에 못 미치며, 저출산을 극복한 주요 3개국* (GDP 대비 가족예산 비중 평균 3.37%)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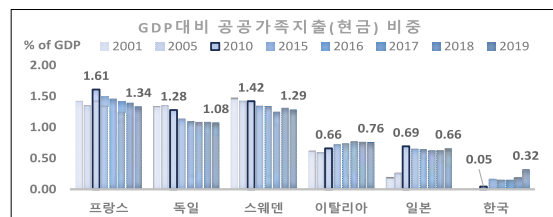
* (3개국의 합계출산율, 2020년 기준) 프랑스 1.79, 독일 1.53, 스웨덴 1.66

- 가족예산 중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등의 현금 지급 기준으로 보면 GDP 대비 0.32%로 OECD 평균(1.12%)의 30% 수준(2019년 기준)

GDP대비 가족예산(TOTAL)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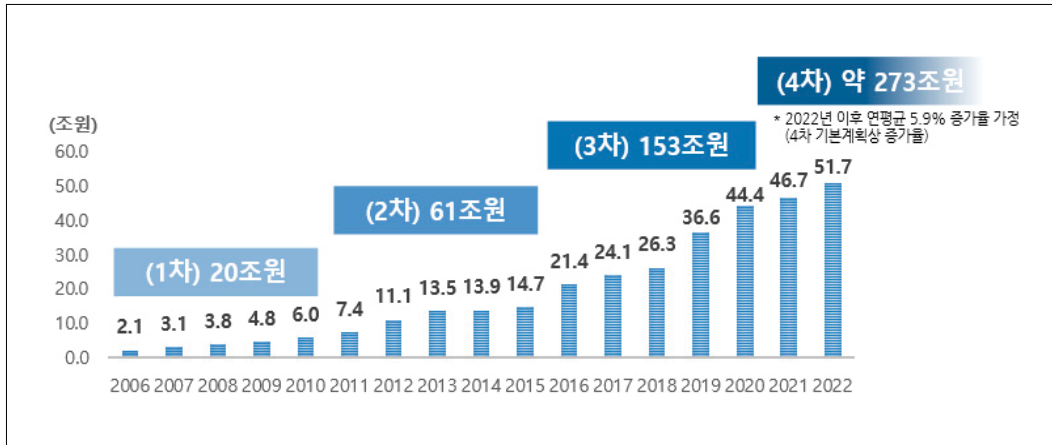
GDP대비 가족예산(현금) 비중



자료: OECD Family Database,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2023.3.15)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주: 가족예산은 아동수당, 육아휴직 혜택 및 보육 지원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함. 총액은 현금, 서비스, 세제혜택으로 구성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저출산 대응 예산 추이]



주: 예산은 중앙정부 사업을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등이 포함된 수치(지자체 자체사업 예산은 미포함)이며, 연도별로 2006년~2020년은 결산기준, 2021년 및 2022년은 시행계획상 예산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출처: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저출산 대응 예산 범위]

■ 저출산 대응 예산 사업 범위의 적정성

- 저출산 대응 과제 중 군무원, 장교, 부서관 인건비 증액, 대학 육성사업,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관광 활성화 사업, 창업 지원 사업 등 저출산 대책과 관련성이나 효과성이 낮은 과제 포함

< 저출산 대응과 직접적 연관성 낮은 사업(예시), 2022 >

(단위: 억원)

저출산 대응과 연관성 낮은 사업(과제) 예시	2022년 예산 기준
(국방부) 군무원, 장교, 부서관 인건비 증액	987
(교육부)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4,070
(교육부) 그린스마트스쿨 조성(디지털기기 인프라, 학교 단열성능 개선, 태양열 설치)	18,293
(고용노동부)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내일배움카드 K-Digital Training)	3,24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활성화 및 지역문화 진흥, 예술가 지원	214
(중소기업벤처부) 창업자 육성을 위한 사업화, 마케팅 지원 등	2,683

주: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자료, 언론보도, 보고서 등에서 언급된 사업을 위주로 작성하였음.
자료: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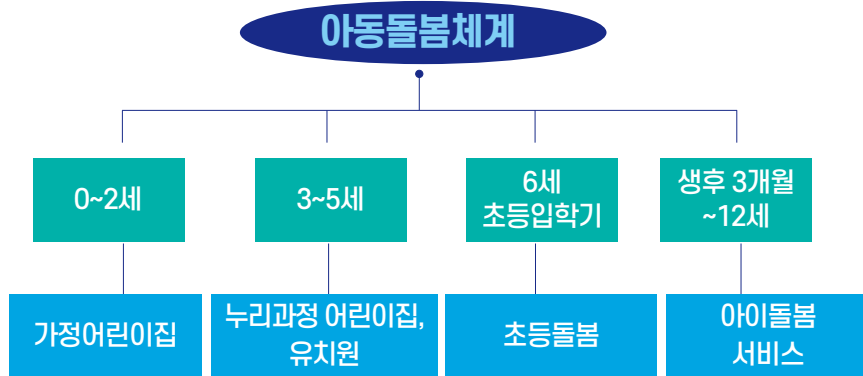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3. 아동돌봄 인프라 붕괴와 돌봄 사각지대 확대

1) 아동돌봄체계

아동돌봄체계 = 가정어린이집 + 어린이집, 유치원 + 초등돌봄 + 아이돌봄서비스

영유아기 아동돌봄체계는 확대된만큼, **저출생 효과로 위기를 맞이함. 문을 닫는 어린이집, 유치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돌봄사각지대 확대, 대안적돌봄시설 설치 시급**



출처: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저출생시대 아동돌봄 정책 국회포럼, 2023, 재구성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1) 아동돌봄에 집중 투자에도, 왜 계속 불충분?

- **현행은 투자 부족? 효율성? 아니면 사각지대?**
 - 부모의 시간과 아이의 시간간 사각지대 존재 문제
 - 초저출생 현상과 맞물려 자녀 양육 부담, 출산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 형성
- **개선책은 보육의 질 제고, 사각지대 해소(출산과 양육의 소중함 - 긍정적 가치관 형성)**
- **보육교사의 자긍심 고취**
 - 처우 개선 등 획기적 확대
- **보육·돌봄서비스 제공시간 조정 + 육아기 부모노동시간 조정 = 유기적 연계 강화**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근로시간 조정
 - 육아재택 등
- **종교계·교육계·언론계·정치계 등 지속적인 출산·돌봄제도 개선 노력 중요**
- **돌봄의 사회화지향정책에서 함께 돌보는 사회문화 조성, 민주적 돌봄 지향 정책 패러다임 확장필요(Tronto, 2014 돌봄민주주의)**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2) 아동보육돌봄인프라 붕괴에 대한 적극적 대응

- 현행은 급격한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임신, 출산 및 양육 돌봄 인프라 (산부인과, 소아과, 어린이집, 학교 등) 붕괴 가속화
 - 이로 인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렵다는 부정적 인식이 더 확산
- 개선책은 돌봄 인프라 붕괴의 악순환 고리 타파
 - 돌봄 인프라를 시장과 함께 정부차원 적극 대응 필요
 - 태어난 아이를 국가가 보호 해줄 수 있고 좋은 질의 보육서비스,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신뢰감 부여, 현재 젊은 연령층의 결혼과 출산기회에 대한 청사진 제시 필요: **종교계와 협력하여 긴급돌봄 인프라 구축 시급**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3) 아동돌봄서비스 수요대비 공급의 불균형

연령대별(미취학, 초등학령, 중·고등학령 아동) 아동돌봄서비스

0~2세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40.9%**

0세반이 없는 어린이집 **42%**

전국 어린이집 10곳 중 4곳은 0세반을 운영하지 않아.

전체 3만여 곳의 어린이집 중 0세반이 없는 곳은 1만3060곳으로 42%

(동아 23.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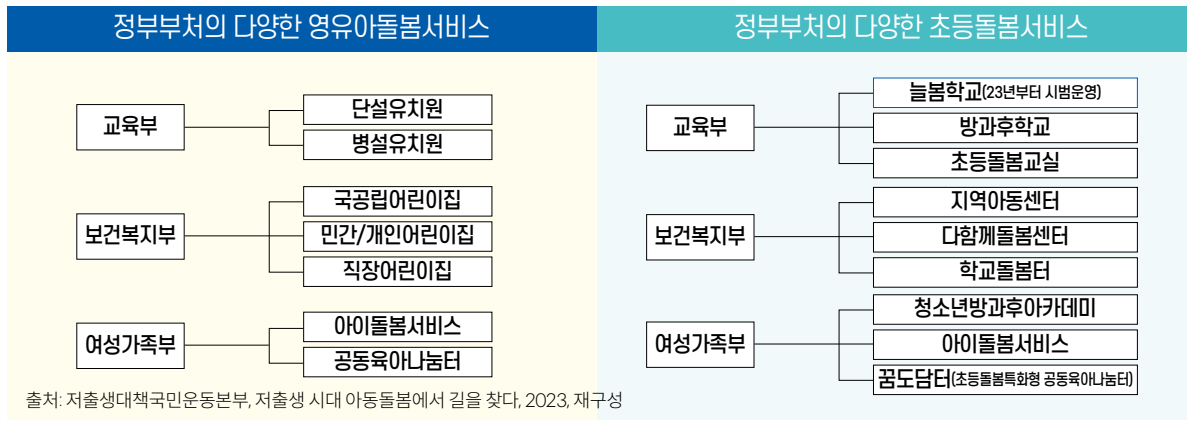
6~12세 초등학령 아동의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5%**

출처: 온종일돌봄수요조사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4) 아동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다양성과 분절성의 비효율-아동돌봄청 신설 시급

- 영유아 돌봄은 3개 부처 7개 서비스로 초등 돌봄 서비스 3개 부처 9개 돌봄 체계로 분산되어 있음.
- 부처 간, 돌봄 체계 간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아동 돌봄 서비스의 연계·조정되지 못하고 있음.
- 초저출생 대책 - 국가책임제, 공공정책시행을 통한 일관성 있는 아동돌봄정책 실시위한 아동돌봄청 신설 시급.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5) 아동돌봄정책의 변화 방향

영유아 대상 돌봄체계는 확대 지향보다 질적 수준 확보와 폐원에 따른 **돌봄공백에 대응**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 초등생, 특히 저학년 대상 돌봄(+교육)체계 구축을 토대로 '초등돌봄절벽' 해소를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늘봄학교 확대는 이러한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늘봄학교 확대와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늘봄학교와 더불어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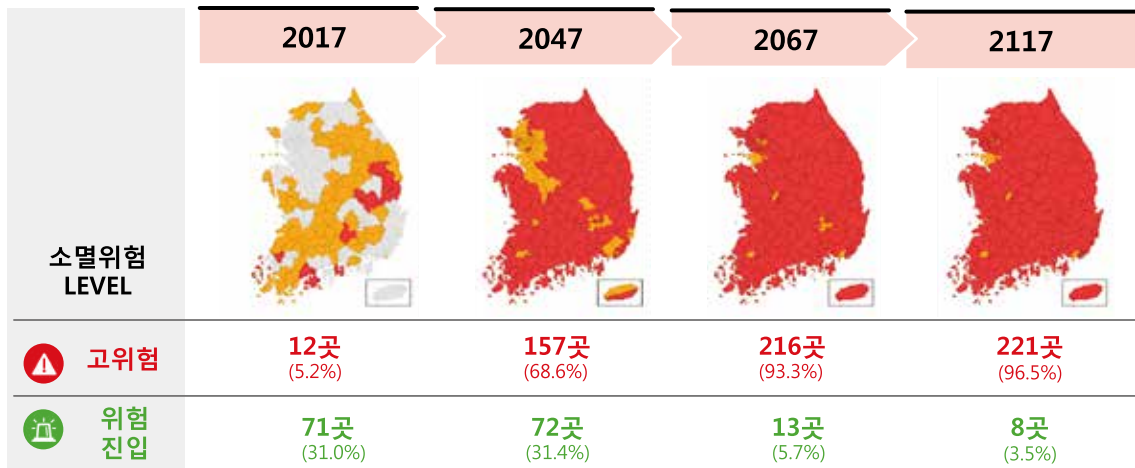
어린이집과 유치원 폐원에 따른 돌봄공백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하루의 돌봄공백도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모와 아동이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돌봄서비스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출처: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저출생시대 아동돌봄 정책 국회포럼, 2023, 재구성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2) 아동돌봄 인프라 붕괴와 지역소멸

(1) 시군구별 장래 소멸위험 지역 분석



※ SOURCE : KBS (자료 감사원)

© KBS가 감사원 자료에 기초해서 전국 소멸위험지역(오른쪽 그래프 참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돌봄사각지대의 발생과 소멸위험지역의 확대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돌봄사각지대 발생과 지역 붕괴 돌봄 시설 감소의 나비효과 '지역소멸'가속

(2) 아동돌봄 인프라 감소가 지역소멸 가속화



0~3세 돌봄시설 확보의 시급성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으로 ‘돌봄’에 주목

>> 심각한 저출생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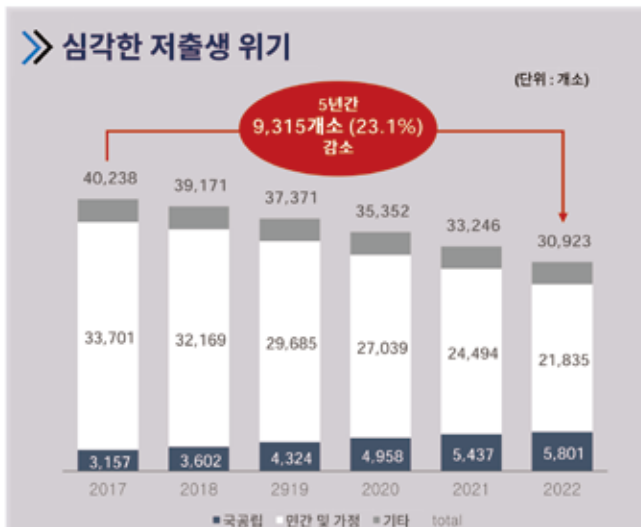
저출생은 교육, 직업, 보육, 주택 등 다양한 사회 구조에서 기인한 복합적 문제

해답은
“**돌봄**”
특히
아동돌봄에
주목

0~3세 돌봄시설 확보의 시급성 이어지는 어린이집 폐원...돌봄 공백 심화

(3) 아동돌봄 인프라 붕괴와 돌봄 공백 확산

>> 심각한 저출생 위기



저출생으로 인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폐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고
있으나,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공백 대응 역부족

돌봄 공백지역
광범위하게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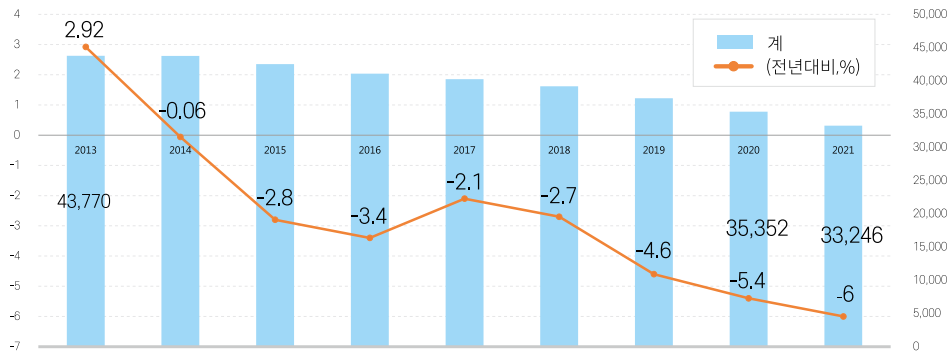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어린이집 수 감소 추세

전년도 대비 어린이집 수 감소 추세가 심화. 2017년 전년도 대비 2.1% 감소한 어린이집 수는 2021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감소율이 6% 감소. 1년 사이 2천개소 이상 어린이집이 문을 닫음.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다고 해당 지역에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님. 결국 어린이집 폐원 추세와 더불어 해당 지역별 돌봄공백 문제 결국 지역 소멸 가속화 발생.

*** 2021년 33,246개소 2022년 30,923개소로 2,323개소 감소**



어린이집이 갑작스럽게 폐원하면서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이동이 어려운 학부모들의 고통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 최근 5년간('15~'19) 폐원 어린이집은 총 11,563개, 관련 민원은 1,800건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s://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tag=&act=view&list_no=9122&nPage=), 2020년 6월 8일.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어린이집 현황]

(단위 : 개소, 만명, %)

	2019		2020		2021		2022	
	개소수	현원	개소수	현원	개소수	현원	개소수	현원
어린이집								
계	37,371 (100.0)	136.5 (100.0)	35,352 (100.0)	124.4 (100.0)	33,246 (100.0)	118.5 (100.0)	30,923 (100.0)	109.5 (100.0)
공공								
보육	6,820 (18.2)	38.5 (28.2)	7,490 (21.2)	39.8 (32.0)	7,970 (24.0)	40.6 (34.3)	8,346 (27.0)	40.3 (36.8)
그외	30,551 (81.8)	98.0 (71.8)	27,862 (78.8)	84.6 (68.0)	25,276 (76.0)	77.9 (65.7)	22,577 (73.0)	69.3 (63.2)

주 : 공공보육 어린이집은 국공립(70%), 사회복지법인(15), 직장 어린이집(15%)을 포함. 그 외 어린이집은 법인/단체 어린이집(3%), 민간(43%), 가정(54%), 협동 어린이집(0.6%) 등으로 구성됨(비율은 2022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작성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2022년 영유아 보육현황
 영아 59.5% vs. 유아 40.5%

(2022.12.31 현재, 단위:명)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총 계	1,095,450	276,670	64,503	27,743	477,623	484,053	3,203	61,650
만0세	126,606	21,522	3,603	1,393	40,747	56,025	110	3,206
만1세	239,157	56,171	9,525	3,786	88,140	68,929	358	12,245
만2세	285,937	71,160	14,104	5,907	121,627	58,018	676	14,445
만3세	165,335	48,501	12,855	5,577	84,600	572	690	12,540
만4세	135,413	39,099	11,135	5,100	69,089	250	676	10,062
만5세	138,322	39,191	11,489	5,340	72,338	239	688	9,037
만5세이상	4,680	1,026	1,789	640	1,087	20	3	115

※ Source : 2022 보육통계자료 (보건복지부)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연도별 영유아 추계 인구
 2023년 대비 2030 영유아 인구 13.7% 감소

(단위:명)

연도	합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2021	2,487,169	273,072	291,042	319,932	347,740	385,741	428,920	440,722
2022	2,295,053	258,445	270,134	289,489	318,649	346,395	384,339	427,602
2023	2,103,055	243,483	256,003	268,991	288,547	317,585	345,228	383,218
2024	1,945,263	231,015	241,499	255,273	268,436	287,843	316,758	344,439
2025	1,831,524	232,832	230,234	241,476	255,251	268,158	287,336	316,237
2026	1,759,916	246,534	232,045	230,246	241,488	255,015	267,710	286,877
2027	1,731,098	259,675	245,672	232,067	230,288	241,285	254,606	267,303
2028	1,734,556	272,584	258,917	245,566	232,124	230,115	240,912	254,238
2029	1,762,753	264,326	271,534	258,873	245,712	231,966	229,771	240,571
2030	1,514,972	294,797	253,189	271,453	271,453	245,542	231,636	229,459

출처 : 보건복지부(2023), 2022 보육통계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연도별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수 추이 (2013년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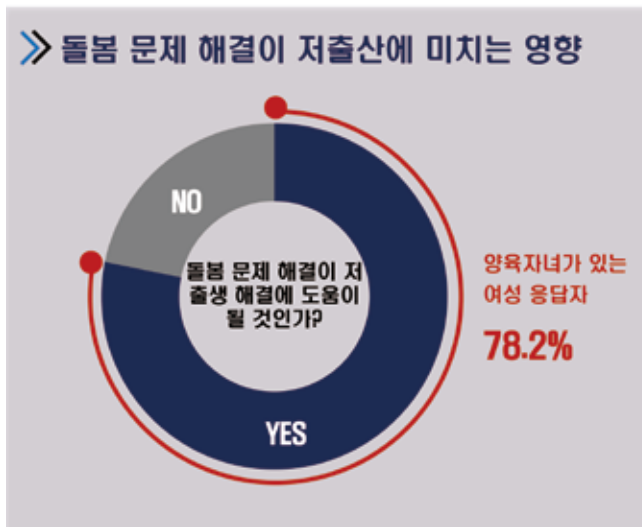
(단위:명, %)

연도	유치원	2013년 대비 증감률	어린이집	2013년 대비 증감률
2013년	658,188		1,486,980	
2014년	652,546	- 0.9%	1,496,671	+ 0.7%
2015년	682,553	+ 3.7%	1,452,813	- 2.3%
2016년	704,138	+ 7.0%	1,451,215	- 2.4%
2017년	694,631	+ 5.5%	1,450,243	- 2.5%
2018년	675,998	+ 2.7%	1,415,742	- 4.8%
2019년	633,913	- 3.7%	1,365,085	- 8.2%
2020년	612,538	- 6.9%	1,244,396	- 16.3%
2021년	582,572	- 11.5%	1,184,746	- 20.3%
2022년	552,812	- 16.0%	1,095,450	- 26.3%

출처: 보건복지부(2023), 2022 보육통계

돌봄사각지대 발생과 지역 붕괴
돌봄 시설 부족은 출산율 반등의 저해 요소

(4) 아동돌봄 인프라 붕괴와 출산율 반등 저해 요소



저출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폐원은
 합계출산율 반등의
 주요 저해요소

돌봄 서비스가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

출처: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연구조사(2021.11.7, “교회의 돌봄사역에 관한 조사”, (주)지앤컴리서치)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전국 시도별 공공어린이집 비율(총 30,923개소)] 2022.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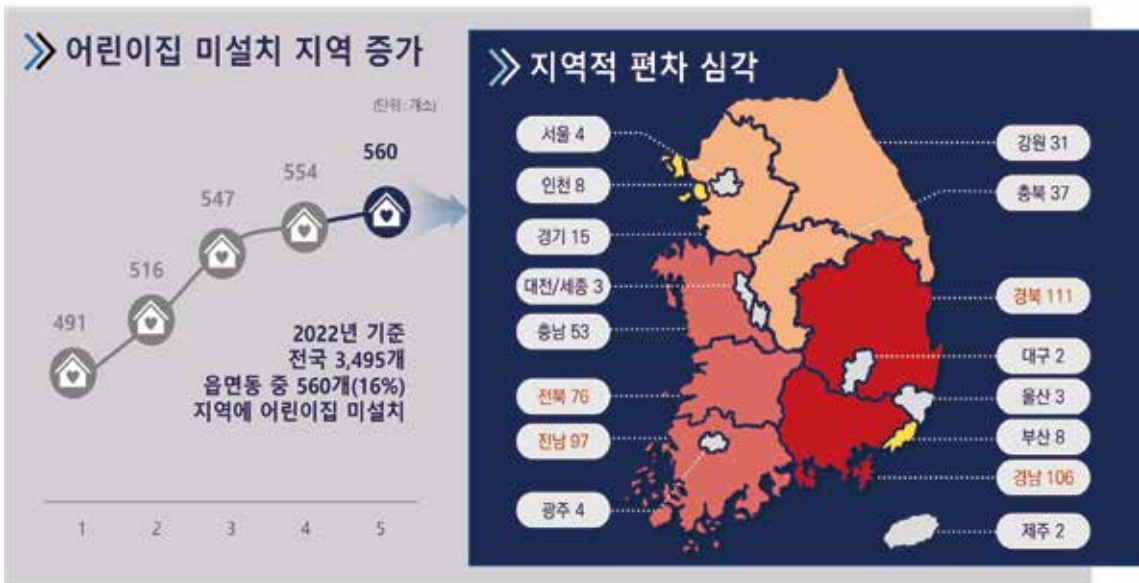
(단위: 개소, 명, %)

구분	개소 수			현원		
	공공	민간 등	공공어린이집 비율	공공	민간 등	공공어린이집 비율
계	8,346	22,577	27%	402,823	692,627	37%
서울	2,154	2,558	46%	95,089	72,338	57%
부산	442	1,105	29%	21,381	34,469	38%
대구	394	745	35%	19,065	23,422	45%
인천	382	1,315	23%	17,556	44,644	28%
광주	258	682	27%	11,924	19,808	38%
대전	210	803	21%	10,393	17,751	37%
울산	146	510	22%	6,838	18,054	27%
세종	147	180	45%	8,089	6,838	54%
경기	1,682	7,756	18%	93,378	238,138	28%
강원	310	596	34%	14,712	17,968	45%
충북	277	695	28%	14,251	24,633	37%
충남	347	1,169	23%	15,058	37,138	29%
전북	286	738	28%	12,549	22,240	36%
전남	381	618	38%	17,803	21,124	46%
경북	335	1,128	23%	14,718	34,270	30%
경남	457	1,66	22%	21,427	47,414	31%
제주	138	313	31%	8,592	12,378	41%

주: '공공 어린이집'에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 어린이집을 포함. '민간 등'에는 법인/단체 어린이집, 민간, 가정, 협동어린이집 등을 포함하였음.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22 자료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제작

돌봄사각지대 발생과 지역 붕괴 돌봄 사각지대 _ 지역적 편차 심각

(5) 아동돌봄 사각지대 지역적 편차 심각



출처: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보건복지부) 자료 2023.04.28

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각 어린이집의 행정동 정보 기준, ② 총 지역수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행정기관(행정동) 및 관할 법정동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6) 전국 아동돌봄 사각지대와 지역소멸

◆ 젊은 층 인구 유입에 걸림돌, 특정 지역 소멸가속

- 아동돌봄 시설은 청년층 인구 유입이나 그 지역에 남아있는 인구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
- 마지막 남은 어린이집이 사라지면 특정 지역 소멸이 앞당겨짐.
- 보육 인프라는 시·군·구 단위, 읍·면·동 등 동네 단위로 돌봄에 대한 종합적 대책 수립이 필요.
- 마을 단위 **맞춤형 소규모 대안적돌봄시설** 설치 시급.
- 거점 중심으로 인접 마을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거점형 대안적돌봄시설’** 추진 필요.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 영유아 인구 밀도 현황 등 보육과 돌봄 취약지역 분석

- 경기도가 주거인구, 유동인구 분석 등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및 보육 취약지역 상시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실시함.(2023. 8. 17)
- 연령대별 인구 추계, 영유아 인구 밀도 현황, 보육 취약지역 분석.
- 데이터 분석 모델 고도화 사업 완료 계획.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 경기도 1년에 800개 씩 어린이집 폐원

- 경기도내 567개 읍·면·동 중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총 136곳(24%)**.
- 2018년~2022년 5년간 **경기도 총 4,098곳 어린이집 폐원(연평균 820곳)**.
- 현재 9,080곳이 남아있음.
-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우면 원도심 **주택 매입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재정 자립도 낮은 지역에서 **공사비 마련이 어려움**.
- 보육 수요 적은 구도심 일반주택 단지와 구축 공동주택 단지일수록 **보육 사각지대가 커짐**.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 부산시, 경북 보육사각지대 확대는 현재 진행중

- 부산시 50년 된 어린이집 폐원.
(공립 금성 어린이집, 지하 1층·지상 2층·연면적 396.16㎡)
- 부산시 어린이집 2020년 1,778개소에서 현재 1,457개소로 **3년사이 321개 감소**.
- 부산 **영유아(만0~5세) 감소**는 현재 진행형
(지난해 10만 4,827명, 부산 인구대비 3.15%)
- 경북 보육시설이 없는 곳 **111개소**(2022년) 2015년 60개,
상주시 어린이집 현 28개소 감소, 24개 읍·면·동 중 13개지역에 돌봄시설 없음.
- 미설치 지역에 사는 영유아는 멀리 떨어진곳 이용

경북지역 보육시설 현황 어린이집 폐원 급증



출처 : 2022보육통계자료(보건복지부)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 전남도 위기의 어린이집 점점 사라진다

- 가정어린이집은 태어나 만 2세 아이를 돌보는 보육의 최전선.
- 전남 지역 어린이집 2018년 1,205곳, 2022년 958곳으로 **247곳 폐원(31.4% 감소)**
- 전남에서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이 95곳으로 증가.
- 광양시 가정어린이집 5곳 폐원, 농촌과 원도심은 폐원 속도가 빠름.
- 가정어린이집은 영아 부모님들이 가깝게 위치했기 때문에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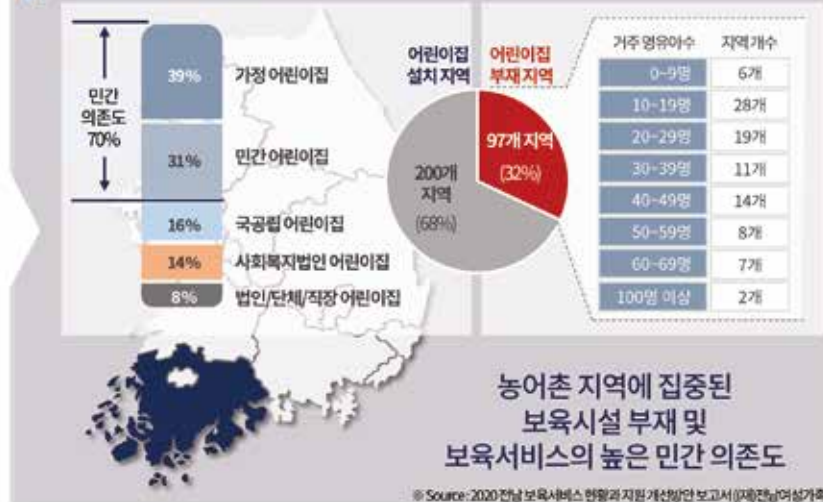
전남지역 보육 시설 현황

어린이집 부족으로 보육부담 가중

전남 어린이집 감소



보육 공백 심화



출처: 전남 보육서비스 현황과 지원 개선방안 보고서 (재)전남여성가족재단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 전북도 어린이집 폐원 진행 중

- 2018년 1,397곳에서 **2023년 5월 860곳**으로
최근 5년간 전북도 내 어린이집 **537개 폐원**
- 도내 읍면 지역 내 어린이집이 1곳에 불과한 지역이 49곳이며,
원아 충원율은 42.9%
- 보육시설 부족으로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현실, 청년들 농어촌 정착 의문.
- 어린이집 없는 읍·면·동이 **78곳**이며 대부분 농촌임.
- 김제(10곳), 정읍·임실(9곳), 남원·진안(8곳), 고창(7곳), 부안(6곳), 익산(5곳), 장수·순창(4곳), 군산·무주(3곳), 완주(2곳)

전북지역 보육시설 현황 농촌 지역붕괴 촉발하는 보육 인프라 부재

전북 어린이집 감소



출처: 2023 보육통계자료(보건복지부)

농어촌 인프라 붕괴 심각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7) 돌봄사각지대 해소정책의 실효성 확보 필요

◆ 어린이집 등 아동돌봄을 위한 돌봄 사각지대 대책의 실효성 확보 필요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읍 면, 도서지역에 마을회관 또는 기타 유휴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원칙으로 하며 신축도 가능
- 단 시설 리모델링 신축 때 보육 영유아 수(3인 이상 20인 이하), 지역 면적이 넓어 실질적으로 기존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 실제 어린이집이 없는 읍 면 동이 560곳으로 대안적돌봄시설 활용할 때 신축비 절감 및 돌봄공간으로 적합성 등 신속한 돌봄사각지대 해결
- 대안적 아동돌봄시설을 통해 초저출생 위기 속에 농어촌과 도서지역 위기 아동돌봄을 위해서는 접근성, 안정성, 지속가능성, 신뢰성, 책임성을 갖는 아동 돌봄이 시급히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 아동돌봄사각지대 해결위해 유보통합 이전이라도 긴급 대안적돌봄시설 설치 필요.
- 유보통합 완성 예정이 2025년, 통합사업이 정착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초저출생위기 해결을 위한 **골드타임은 3년** 내에 시급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종교시설을 이용한 돌봄시설 설치의 필요성 종교 유휴공간 이용한 돌봄 공백 보완

4. 대안적 아동돌봄시설을 통한 돌봄부재 극복방안

» 종교시설 활용한 돌봄 서비스 확대



전국 기준 돌봄 서비스로 활용 가능한 종교 유휴시설 10만 여개
단기간내 돌봄 공백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1) 아동돌봄 역사와 발전과정에 기독교는 소외된 사각지대에서 시작

구분	내용
시설보호 중심의 아동돌봄	- 1921년 태화기독교 복지관의 빈민 아동 대상 구제사업이 첫 시작 - 1950~60년대 아동양육시설 확충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인정 시작	- 1968년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요령 공포: 어린이집 증설 - 1987년 남녀 고용 평등법에 따른 직장탁아제도 도입 - 1991년 영유아 보육법 제정: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충
아동돌봄의 제도화를 통한 양적 확대	- 1980년대부터 운영되던 공부방을 2004년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으로 제도화 - 2005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시범사업, 2011년 법적 근거 마련 - 2004년 교육부 고시 기반 초등돌봄교실 도입
아동돌봄의 보편성 인정	- 2013년 누리과정 도입 - 2018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추진: 다함께돌봄센터 도입

출처: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에 길을 묻다, 2023, 재구성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2) 아동돌봄 서비스를 위한 종교의 역할 종교시설을 활용한 보육시설 사례 <어린이집>

(1) 서울시 마포구 종교시설 활용 어린이집

- 마포구 택지 개발사업 지구 내 분양 방은 종교용지의 용도변경
-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준공 10년 이내에도 종교용지의 용도 변경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 (국토해양부, 서울시)
- 서울 상암동 하늘빛교회 구립어린이집 운영 (만1세~4세 : 45명)
- 10년간 교회 1층 공간 마포구에 무상임대

전국 최초
2013. 6. 14
개원식

(2) 서울시 성북구 종교시설 활용 어린이집

- 종교시설에서 10~20년간 무상임대
- 어린이집 리모델링 경비와 운영비 지원
- 4개 종교법인과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위한 협약 : 정릉제일교회, 종암 중앙교회, 여의도순복음성북교회, 임마누엘 교회

종교단체
업무협약
2013. 11. 6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3) 서울시 영등포구 종교시설 활용 어린이집

- 영은교회가 설립하는 지상 8층 건물 중 1층에 국공립어린이집 조성
- 영등포구는 리모델링 비용 (1억원), 각종 기자재 설치비 1억원) 부담
- 교회는 구로부터 어린이집 위탁 운영권 부여와 보조금 지원받음
- 구립영은어린이집 (0-3세 영유아 65명)

영은교회-
어린이집
2015. 9월 개원

(4) 서울시 종교시설 활용 어린이집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성결교회-국공립어린이집)
- 서울시 구로구 (고척교회-고척방과후교실) - 2004년 초등학교들 대상, 고척재미난 방과후교실 (정원 40명)
- 서울시 은평구 (성암교회-(사)더불어배움) - 교회공동체, 지역사회 공동돌봄 교육실천
- 전국 시군구 읍면동에 종교시설 활용 어린이집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3) 초저출생시대 공간 재구조화 필요성

(1) 초저출생시대 인구전략 건축의 제도화

- 인구 감소를 현실적 인정하고 축소, 소멸에 대응하는 법적 공간 계획 정립
- **법령정비** - 현법령체계를 발전시켜 축소 및 소멸에 관한 법정 공간 계획이 가능하도록 함
- 별도의 법령 입안
- 단일 지자체 또는 복수의 지자체가 연합하여 인구 시나리오 기반으로 공간 계획 수립

※ 백진 교수(서울대 건축학과)인구전략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국회제2세미나실 2022.9.5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2) 초저출생시대 공공 및 민간설비 정비

1. 양적공급에 치중해온 공공시설의 현황 적정 규모산출, 통폐합, 전용 등 계획 수립
2. 각 공공 시설별 당면 과제 파악 및 인구감소 관점에서 재평가
3. 시설과 시설과의 관계 재검토 재배치 및 도시구조 변혁
4.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신 시설수요 발굴 및 **기존 시설 변혁**
(**종교시설**-호텔 등)
5. **민간시설 정착률 유도**(**대형교회**, 상업시설, 쇼핑몰 등)

※ 백진 교수(서울대 건축학과)인구전략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국회제2세미나실 2022.9.5

종교시설을 이용한 돌봄시설 설치의 필요성

돌봄 아동돌봄 사각지대와 긴급돌봄 등을 통하여
초저출생 극복과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녀를 양육 할 수 있도록 도움

4) 초저출생시대 종교시설 이용, 아동돌봄을 위한 공공성 확보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5. 대안적 아동돌봄 체계 구축위한 입법청원 필요성

1) 종교시설 활용, 돌봄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입법청원**

한국교회와 CTS와 CBS 공동 캠페인

초저출생 대한민국 인구지진 아동돌봄 사각지대 제로

기존 돌봄시설의 사각지대를 책임질 사회적 합의(입법청원 서명)
관련법(건축법,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아동복지법 등) 개정과 제정 등

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청원법 제5조(청원사항) 국민은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3.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등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2) 종교시설이 대안적 돌봄센터로서 장점

- 주민들 일상 생활권 내에 있다.
- 가족 친화적 공동체성이 강하다.
- 출산, 돌봄에 관심이 많다.
- 접근성이 좋다.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신뢰성이 높다.
- 잘 준비된 안전한 공간이다.
- 돌봄에 필요한 다양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 부모들이 선호하는 공간(집에서 가깝기 때문 66%*)이다.

※ 출처: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연구조사(2021.11.7., “교회의 돌봄사역에 관한 조사”, ㈜지앤컴리서치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3) 종교시설 활용시 고려할 사항

< 기존돌봄시설을 제외한 돌봄사각지대에 설치 >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대안적 아동돌봄체계 긴급전환 시급

“전국 읍면동 돌봄사각지대 단1명을 위해 대안적돌봄시설 설치”

국가소멸위기 초저출생 현상 극복으로 초고령화 대비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부모의 인적자본 수준 향상

돌봄과 교육격차 해소와 아동복지의 실현통한 사회통합

지역사회 소멸 방지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및 국가 존립

대안적아동돌봄 체계로 소외없는 돌봄사각지대 해소

KF3023선언 대한민국 희망 미래!

초저출생극복은 종교의 공공성과 공교회성 회복을 통한

“아동돌봄을 우리 함께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 1장 28절)

*라다: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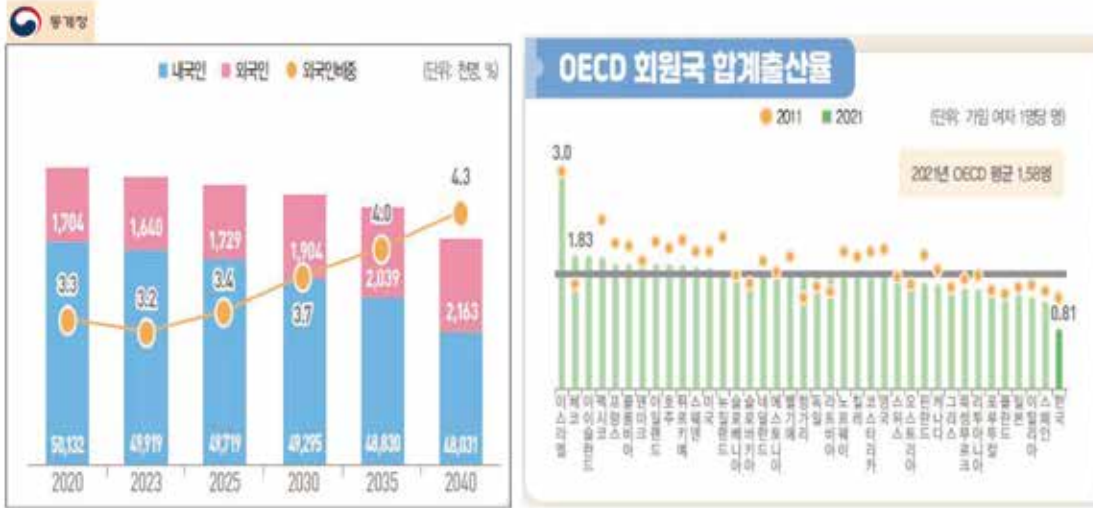
※ KF3023선언 :아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미래, 30대에 2-3명 자녀 출산 운동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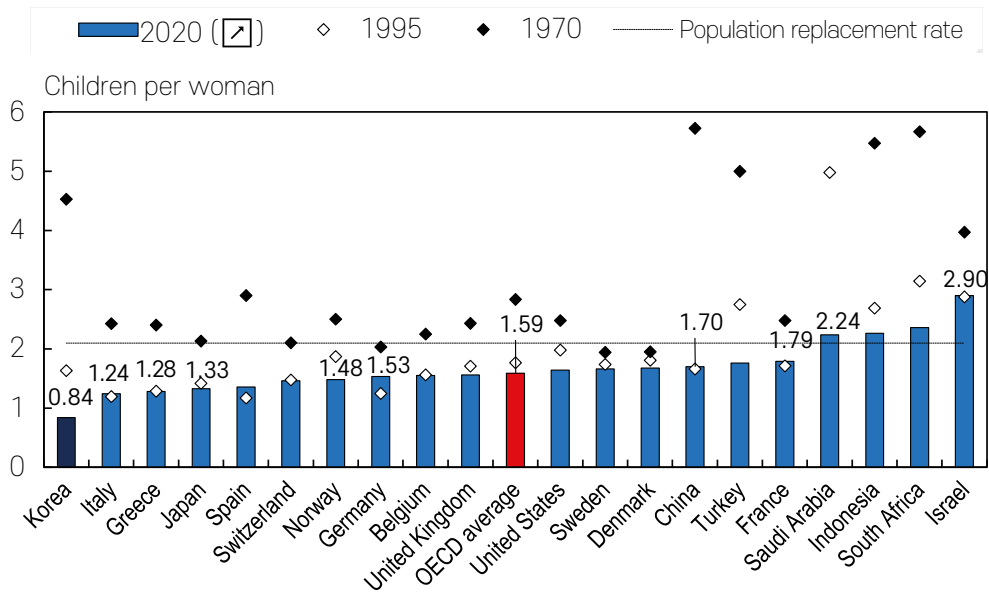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 초저출생 관련 주요 지표 및 통계자료 >

[초저출생관련 주요 지표및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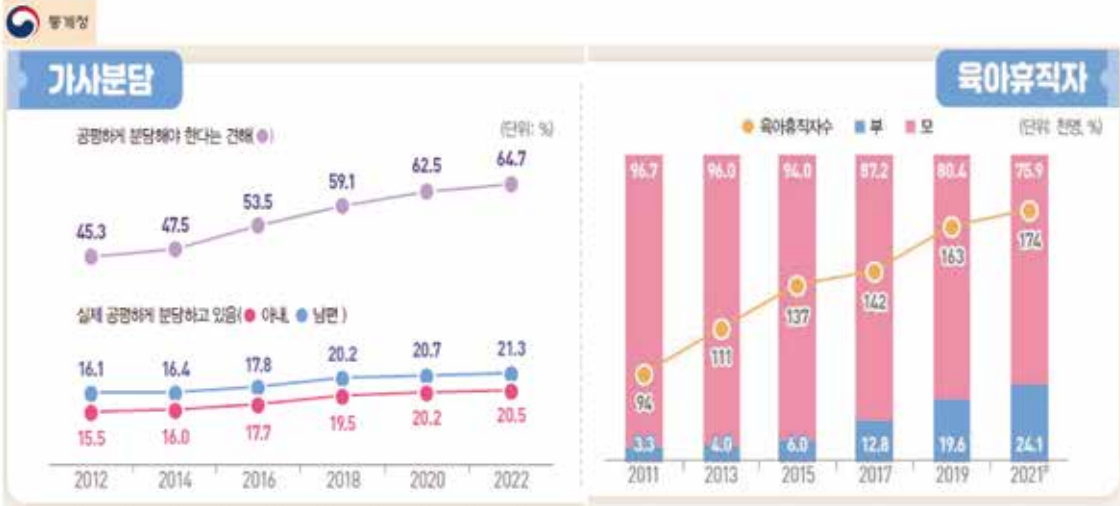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 초저출생 관련 주요 지표 및 통계자료 >

[합계출산율(2020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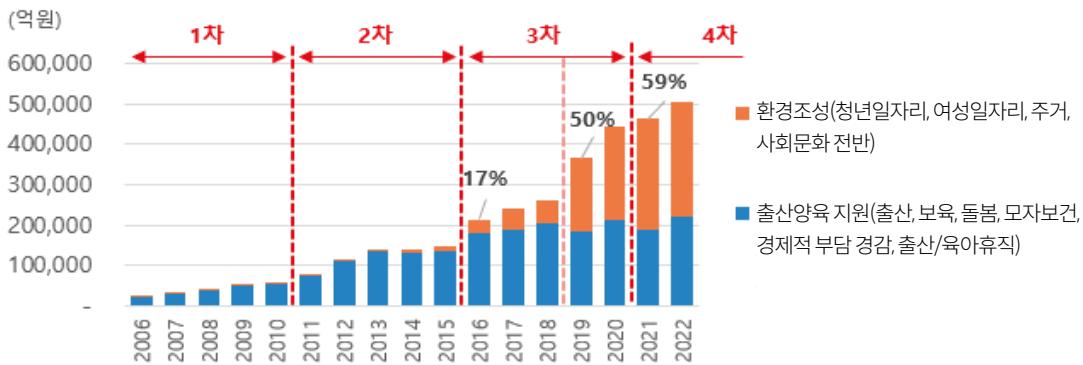
자료: OECD, Family Database, Total Fertility rate 1970, 1995, 2020 일부 발취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 초저출생 관련 주요 지표 및 통계자료 〉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 초저출생 관련 주요 지표 및 통계자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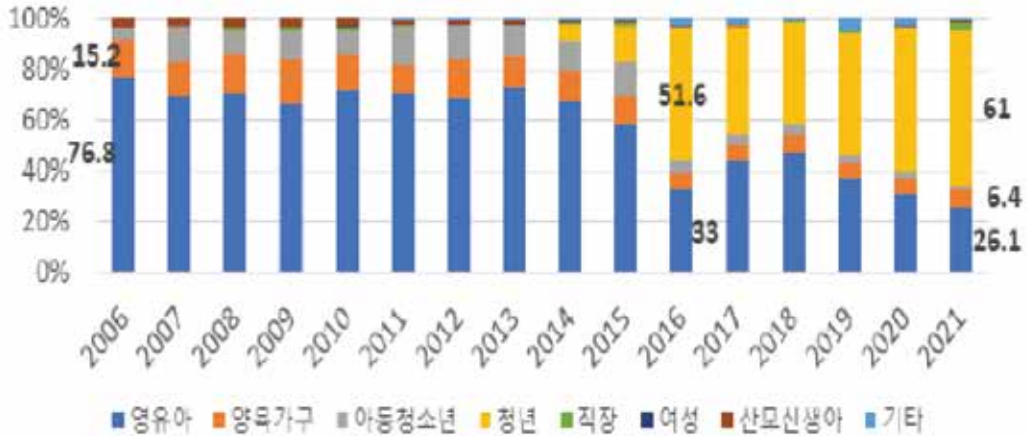
[제1차~제4차 기본계획에 따른 출산·양육지원, 환경조성 예산 증감 추이]



자료: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구분 및 작성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 초저출생 관련 주요 지표 및 통계자료 >

[정책 대상자별 예산 비중 추이]



주: 단, 위의 수치는 '국비'예산을 기준으로 한 비중임에 유의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생률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 초저출생 관련 주요 지표 및 통계자료 >

[2023년도 아이돌봄 기본형 서비스 이용요금표]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 4인가구 기준	시간제(0~12세) (시간당 11,080원)				종일제(36개월 미만) (시간당 11,080원)	
		취학전		취학후		0~2세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418원 (85%)	1,662원 (15%)	8,310원 (75%)	2,770원 (25%)	9,418원 (85%)	1,662원 (15%)
나형	120% 이하	6,648원 (60%)	4,432원 (40%)	2,216원 (20%)	8,864원 (80%)	6,648원 (60%)	4,432원 (40%)
다형	150% 이하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5%)	9,418원 (85%)
라형	150% 초과	-	11,080원 (100%)	-	11,080원 (100%)	-	11,080원 (100%)

주: 휴일 및 야간(22시~익일 06시)은 이용요금의 50%를 가산하며, 가형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 가정에는 5% 추가 지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로 서비스하는 종합형 서비스 단가는 14,400원임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 초저출생 관련 주요 지표 및 통계자료 〉

[아이돌봄서비스 실이용 가구 돌보미 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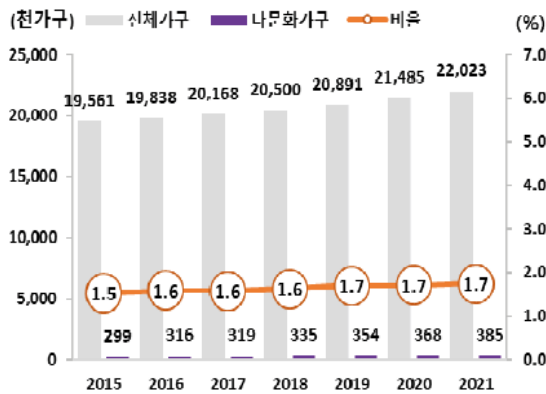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전체)	67,761	59,663	71,789	78,212
가형(소득 75% 이하)	30,572	30,493	36,214	42,094
나형(소득 120% 이하)	13,559	12,812	15,845	18,641
다형(소득 150% 이하)	3,368	2,848	3,484	3,860
라형(소득 150% 초과)	20,262	13,510	16,246	13,617
아이돌보미 수(전체)	24,677	24,469	25,917	26,675
아이돌보미 퇴사자 수	4,857	2,917	2,456	2,637
돌보미 1인당 가구수	2.75	2.44	2.77	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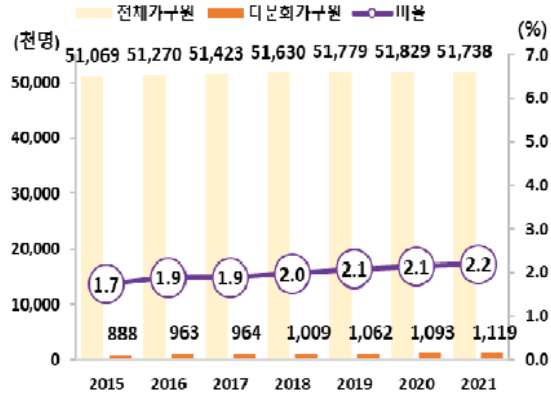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 초저출생 관련 주요 지표 및 통계자료 〉

< 다문화 가구 및 비율 >



< 다문화 가구원 및 비율 >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전수)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생률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 초저출생 관련 주요 지표 및 통계자료 >

[저출산 대응과 연관성 낮은 사업 예시(2021~2022)]

(단위:명)

구분	세부사업명	내용	2021년	2022년
국방부	군인인건비	장교인건비/부사관 인건비 증액	비예산	285
	군무원인건비	군무원 인건비 증액	비예산	702
교육부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스마트 교육 지원 인프라 및 학교 단열성능 개선 태양열 설비 등 설치지원	3,345	18,293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기업, 정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14,017	13,098
	내일배움카드(일반) (K-Digital Training)	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18만명 양성 추진	1,390	3,248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	디지털 공유 인프라 확충	50	175
	중견중소기업훈련지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확대	8	미포함
	근로조건개선지원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설치 운영, 법률 및 심리상담 제공 등 피해자 보호지원	18	8
기재부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혁신형 모델발굴,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한 돌봄분야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	3	비예산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TIP사업)	기술창업 및 성공 사업화 지원을 위한 R&D 및 사업화 마케팅 자금 등 지원	1,468	2,157
	민관협력창업자 육성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사업화 및 해외 마케팅)	428	526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생률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 초저출생 관련 주요 지표 및 통계자료 >

[보육(수당) 및 돌봄 관련 주요사업]

구분	내용
영유아 보육 교육	영유아보육료 지원 - 0~2세: 부모보육료 (월37.5~51.4만원), 기관보육료(221~59.9만원 정부 인건비 미지원 기관) -3~5세: 부모보육료 (28만원)
	유치원 이용 영유아(3~5세) - 국공립 월10만원 사립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비: 국공립 월 5만원 사립 7만원 지원
	시간제보육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영아수당 또는 양육수당 수급중인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 월 80시간 지원 시간당 3천원 지원(부모부담 1천원)
수당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 영유아 소득무관('2022년부터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0~11개월 월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개월 이상 10만원
	영아수당 ('22년) 0~1세 아동(2022년생부터) - 30만원 현금 지원 · 가정양육수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지원(바우처), 종일제아이돌봄 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바우처)
	부모급여 ('23년~) 0~1세 아동(2022년생부터) - 0세 월70만원 1세 35만원 현금 지원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지원 만0세는 차액(18.6만원을 현금지급,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바우처)
	아동수당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 월10만원 현금 지원
첫만남이용권('22년~)	'22년 1월 이후 출생아 대상,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국민행복카드 200만원 일시금 바우처 지급
시설·인건비	보육교사 인건비 직장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인건비, 처우개선비 지원 등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보육 이용률 확대
돌봄 지원	다함께 돌봄사업 지역 내 공공시설 활용, 만 6~12세 아동(초등학생)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등 하원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 ('22년 기준)학기중 14~19시, 방학중 9~18시 운영
	초등돌봄교실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이용하여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초4~중3 청소년 대상 청소년 체험활동, 기초학습 지원활동 급식 및 상담, 부모교육 및 캠프 등 특별 활동, 귀가지도 등 돌봄서비스 제공
	아이돌봄(시간제) 3~36개월 대상 종일제 3개월~만12세 대상 시간제 가정 방문 돌봄 ·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자료: 각 부처 홈페이지 및 사업설명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함께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 초저출생 관련 주요 지표 및 통계자료 〉

[주요 정책 영역별 저출산 사업 결산(2022)]

(단위: 억원, %)

영역 구분	주요사업	(확정)예산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주거	주택구입 전세 자금 융자 다가가매입 임대, 공공임대 용자(출자), 주거급여 청년월세지원 등	204,588	204,588	199,391	97%
보육, 돌봄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 지역 아동센터 등	115,225	114,898	114,587	100%
자녀수당	첫만남바우처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54,600	56,600	54,164	99%
일자리, 직장	청년일자리창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직장 일자리사업, 창업지원, 내일배움카	36,863	36,743	25,961	71% ¹⁾
사회환경, 기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등	25,197	25,197	24,444	97%
모성보호	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17,403	18,278	18,230	100%
자신형성	청년내일채움공제, 보호대상 아동 발달지원계좌 등	15,160	15,160	14,166	93%
교육	교육급여 국가장학금(다자녀)	12,865	12,865	12,865	100%
출산 및 건강지원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난임우울증센터, 생애초기 건강관리 예방접종등	1,851	1,851	1,789	97%

주: 1. 부처별 저출산 대응사업 확정예산 기준으로 시행계획 예산과는 다를 수 있음 2. 일자리 직장 영역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각 38%, 43하기 때문이며 부처는 소규모 지원 사업장으로 채용 전담자가 없거나 잦은 퇴사로 인하여 집행 부진 청년 채용실적 부진 및 지원금 지급 기업의 신청 지연 등으로 인한 불용 발생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음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구분, 각 부처 결산 취합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함께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 초저출생 관련 주요 지표 및 통계자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장제1절 저출산 대책]

구분	주요사업
인구정책 (제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인구교육 (제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 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제8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모자 보건의 증진 등 (제9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 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10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선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방법·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함께출산율 0.7은 “지역 소멸”을 초래
〈 초저출생 관련 주요 지표 및 통계자료 〉**

[저출산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2023~)]

구분	추진 방향
<p>츄츄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내 양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22년 7.8만 가구 27년 3배 수준) -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22년 이용 아동 2만명 27년 6만명 수준) •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 돌봄 수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통합 추진, 어린이집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초등돌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늘봄학교 추진(돌봄 운영시간 19~20시 확대, 돌봄유형 다양화 등), 사교육비 경감수준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 보호아동 지원 한부모·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지원 • ^{가칭}「아동기본법」제정 추진(건강한 출생, 성장 지원 국가사회적 책임 명시)
<p>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 이행력 강화(근로감독 강화 고충 해소 캠페인) • 일하면서도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연령 8세~12세, 기간 24개월~36개월 급여 확대), 재택/유연근무 활성화, 부모 맞돌봄활성화(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중소기업 급여지원 확대) -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특수형태, 예술인까지 확대 검토)
<p>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공공분양/임대, 모기지 지원 대출 확대 등), 자금지원(소득요건 완화 아이 있는 가구의 공공주택 입주요건 완화 등 주거지원 강화) - 입주요건 완화(아이 1인당 10%p 소득자간요건 완화, 다자녀 기준 2자녀로 개선 공급면적 확대, 행복주택 면적 확대, 혼인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구 지원 검토) • 주거정책별 상이한 지원기준 정비, 주거복지 앱 활용 통합정보 제공
<p>양육비용 부담 경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급여 지급 확대(만0세 70~100만원, 만1세 35~50만원) • 자녀장려금 확대(지급액 및 지급기준 개선 검토) • 세제지원 강화(기업 양육관련 지원금 세제지원 강화 등)
<p>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난임 지원 및 부담 대폭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건강관리사업 신설, 난임지원 확대(소득기준 완화, 난임휴가 확대, 냉동난자를 이후 보조생식술 사용시 비용 지원 등 검토) • 2세 미만 아동 의료비 대폭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세 미만 입원진료비 제로화, 2세 미만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 의료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아진료인력 부족에 대해 소아의료체계 확립(23.2.22 대책 발표)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2023.3.28)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토론①]

아동돌봄과 지역사회자원 활용방안

신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임원선 교수



- 송실대 사회사업학과(박사)
-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신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 경기북부가정위탁센터 위원장, 의정부영아원운영위원장,
• 사단법인 아림 대표이사

前)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의정부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보건복지부 보육정책자문단 자문위원,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중앙평가위원장,
한국교류분석임상학회 회장,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회장, 한국미래복지경영학회 회장

아동돌봄과 지역사회자원 활용방안

우리나라의 2023년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2022년 0.78명 보다 낮고, 또 하반기를 고려하면 0.7명 보다 낮은 0.6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은 무엇보다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부양해야 할 노인들이 많아지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을 재정리하여 아동복지정책 패러다임을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자료: 통계청>

아동돌봄과 지역사회자원 활용방안

한국 합계출산율 2023년 2분기

구분	전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전북	경기	울산
2022년	0.78	0.59	0.72	0.75	0.75	0.84	0.82	0.84	0.85
2023년2분기	0.7	0.53	0.66	0.67	0.67	0.79	0.75	0.75	0.77
구분	경남	제주	충남	경북	충북	강원	세종	전남	광주
2022년	0.84	0.88	0.91	0.93	0.87	0.97	1.12	0.97	0.84
2023년2분기	0.77	0.79	0.81	0.84	0.87	0.87	0.94	0.94	0.7

정부와 지자체가 수많은 저출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 우선 가장 낮은 곳은 서울이다. 서울은 0.53명으로 가장 낮고, 가장 높은 곳은 세종 0.94명이지만 1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작년 OECD 합계출산율이 1.58명인 것을 감안하면 한참 떨어지는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아동 돌봄 문제를 더 이상 단편적인 대안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가임여성이 임신을 했을 경우 정부에 신고하여 태아기부터 정부의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태아에 대한 돌봄 뿐만 아니라 임신부에 대한 돌봄까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학령전기 영유아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교육 및 돌봄을 받고 있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규모의 경제에 따라 일정 이용자가 있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의 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부재함에 따라 지역사회를 떠나야만 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서 지역사회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소규모 민간자원을 활용한 **대안적돌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번 입법청원을 통해** 제도를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령기 아동을 위한 현 정부의 ‘**늘봄학교**’는 기존의 학교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전문 민간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아동들이

아동돌봄과 지역사회자원 활용방안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접근성이 높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로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지역사회의 아동과 보호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는 지역사회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양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종교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종교기관은 별도의 투자를 하지 않고도 기존의 설비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돌봄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종교기관이라는 이유로 종교적 편향성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구체적으로는 종교지도자들 및 종사자에 대한 기초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아동돌봄서비스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유사 과목을 확인하여 교육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자녀의 임신 및 출산 욕구가 자연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환경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임신초기부터 국가가 태아의 건강관리부터 시작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외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보다 안정적인 돌봄정책이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②]

우리지역 아동돌봄 사각지대 대안은?



저출생대책국민운동 경남본부장

이경은 순복음진주초대교회 담임목사

-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 및 대학원 명예 기독교 교육학 박사(Ed.D)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20주년 한국교회영적대각성운동본부 여성본부장 역임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부흥사회 여성상임부회장 역임
 -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남지방회장 역임
 - (사)경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역임
- 국제 우드스탁 스쿨(Woodstock School) 명예부모(현)
 - 국회 정치인·경제인·목회자 연합회 총재(현)
 - 연세대 기독교인 연합회 총재(현)
 - 한국스마트방송연합회 목회분야 고문위원(현)
- 제17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총동문회장(현)
 - 재단법인 아바드재단 이사장(현)
 - 순복음진주초대교회 담임(현)

우리지역 아동돌봄 사각지대 대안은?

저출생대책국민운동 경남본부장
이경은 순복음진주초대교회 담임목사

저출생 문제는 지역에서 더 빠르고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소멸이라는 위기에 영남지역이 1위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경남지역에는 지난 4년 동안 850개의 어린이집이 휴원하거나 폐원했습니다. 이는 29%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22년 보육통계를 보면 제가 있는 경남에는 320개 읍면동 중 106개 읍면동에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3분의 1지역에 어린이집이 없는 것입니다. 면적은 10,532.7km² 전국의 10.5%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국에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이 560개로 16% 라면, 경남은 33%로 전국의 두배나 해당하는 지역에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2006년부터 저출생 대책으로 정부에서 쏟아부은 재정이 280조 원을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2년 출산율 통계는 0.78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소아청소년과가 사라진 곳이 662 곳 산부인과가 사라진 곳이 275군데입니다. 어린이집, 아동병원 등 모두 줄고 있습니다. 저출생은 상당히 심각하고 위급한 문제입니다. 교회 역시 어린이 줄고 고령화 비율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단별 주일학교 교세 급감하고 있는데, 2017년 자료에 5만 교회 중에 50%에 주일학교가 없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6년이나 흐른 지금은 더 높은 숫자의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교회의 미래도 교회가 있는 지역의 미래도 없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전국의 5만 교회가 지역사회의 아동돌봄이라는 공적인 활동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지역은 어린이집도 없고 소아과도 없지만 교회가 없는 지역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지역 아동돌봄 사각지대 대안은?

그래서 저는 교회와 종교계가 다함께 저출생 대책에 나서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 교회의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출가한 딸이 이제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아이를 낳지 않아서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 하니까 “낳으면 믿고 맡길 데가 없다”고 하면서 엄마가 내 아이를 키워준다면 아이를 낳겠다고 하더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부모가 되어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믿고 맡길 때만 있으면 이 엄마들은 출산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믿고 맡길 데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어린이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30일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3년 새 어린이집이 줄은 만큼 어린이집 대기자가 23.5% 급감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출생 여파로 어린이집(0-5세 보육) 대기 아동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막상 입소는 어려워지고 있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출생 직후 대기를 올려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현황

●감소폭은 2019년 대비. ●자료 보건복지부



<2023.5.30. 한국일보, 민간어린이집 현황>

우리지역 아동돌봄 사각지대 대안은?

기사에 인용된 예로 노모(44)씨는 “쌍둥이를 같이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을 겨우 찾았는데, 어린 나이를 이유로 입소를 거부해 보육료만 6개월 지불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빠른 입소를 위해 아예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서울 마포구에서 용산구로 집을 옮긴 임모(35)씨는 “4월 복직에 맞춰 어린이집을 알아봤는데 갈 곳이 없어 이사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경남 합천의 한 어린이집은 정원이 74명인데 지난해 33명을 보육하였으나 올해 0세 입소는 단 2명에 6세반 5명이 유치원으로 올라가면 6-7세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폐원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정 문제로 폐원을 하게 되면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은 이원을 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보육공백 뿐 아니라 집 가까이에 어린이집이 없어서 그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지역마다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갖는 장점으로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사랑과 섬김,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인격으로 빠른 가치관으로 이렇게 키워줄 수 있는 아주 믿고 맡길 만한 곳이 저는 교회(종교기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동 돌봄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아동돌봄 시설을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청원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는 외적으로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저출생극복을 위해서 교회가 사회적 환원운동을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대표적 기관이 된다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당진동일교회는 비닐하우스에서 시작할 때부터 동네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 지역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집에서 방과후교실 그리고 대안학교까지 다음세대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출산율도 올라서 그 지역의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지역 아동돌봄 사각지대 대안은?

지역의 교회가 작다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지역과 더욱 가깝게 지내면서 그 지역의 필요를 섬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지금 육아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 때문에 교회 내에서는 못하고 교회 앞에 집을 마련해서 육아품앗씨를 하려고 하는데 제도권안의 서비스를 하려면 허가가 필요해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걸리게 될 수 있어서 지금은 교회 자원을 활용하여 교회 자체적으로 육아쉼터를 준비하였습니다.

혼자서 아이 하나 키우는 건 어렵지만 두 사람이 두 명을 키우는 건 쉽습니다. 그리고 다섯명이 아이 다섯을 키우는 건 더 쉽습니다.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서로 도우면서 육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우려고 합니다. 먼저는 공부방처럼 교회에 오면 밥도 주고 숙제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교사를 준비하여 막 시작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약 3년간 서로 만나고 같이 하는 일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는 관계가 소홀해 지고 개인이기주의가 만연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도 있습니다. 문지마 칼부림이나 학생이 교사를 때리고 어디서는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학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이 아이를 키우기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여러 교회에서 다음세대를 돌봄으로 인성을 책임지고 부모의 손도 덜어주고 있습니다. 당진동일교회도 그렇고 김포에 있는 두란노교회 그리고 광양대광교회 등 지역에 있으면서 아동돌봄에 앞장서는 교회에서는 실제로 자녀가 평균 3명인 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자체 출산율만으로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보다 월등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교회는 이미 여러 가지 출산장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교회에서는 올해부터 출산축하금을 교회에서 지원하고 공동육아 나눔터를 설치하기로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또 다자녀

우리지역 아동돌봄 사각지대 대안은?

가정들을 세워주고 장학금을 주는 등의 지원도 한다고 합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도 2012년부터 출산축하금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급 금액도 올려서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넷째는 500만 원 다섯째는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선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는 저출생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의 노력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더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운동으로 아동돌봄에 참여한다면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론③]

지역소멸과 아동돌봄서비스

유원대학교 교양융합학부

안광현 교수



- 지속가능연구원장
- 지방자치아카데미원장
- 전) (사)공공자치학회 회장
- 전) 대통령직속 TFT 자치분권전략회의 위원
- 전) 서울시 공익사업평가위원회 분과위원장
- 전) (사)한국다문화협회 부회장을 역임
-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MATS
- 송실대학교 행정학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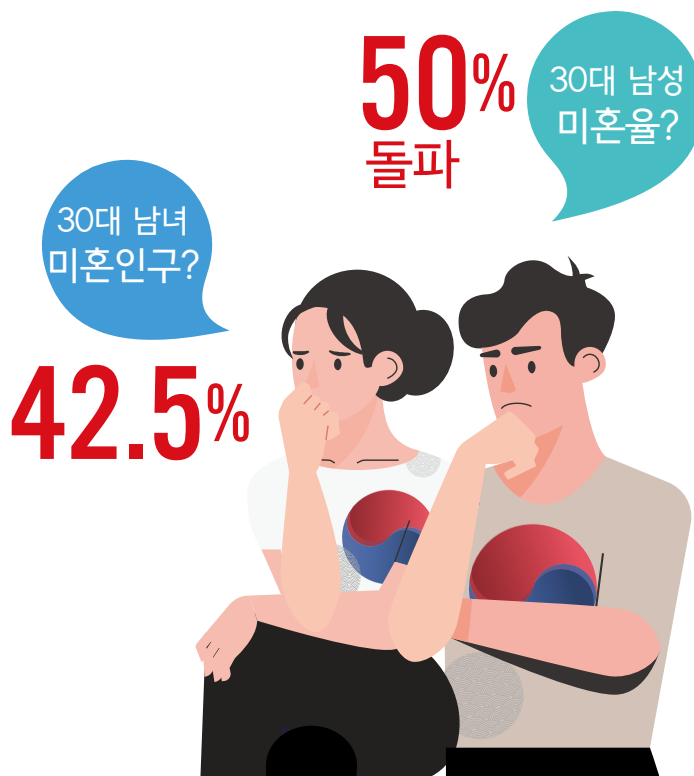
지역소멸과 아동돌봄서비스

1. 시작하는 말

아이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데 결혼을 하지 않는다. 2020년 기준으로 30대 남성의 미혼율이 50%를 돌파했다. 30대 전체 남녀 미혼인구는 42.5%이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역의 젊은층 수도권으로 이주가 가속화하면서 지역소멸은 더 빨라지고 있다. 수도권 인구집중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가운데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방소멸위험에 대한 경고 등이다.



지역소멸과 아동돌봄서비스

2. 지역소멸의 의미

지방소멸은 어떤 의미일까?

실제로 그들에게 가장 큰 과제는 “늙고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있는가?,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사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이다.

지역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져오는 문제의 핵심은 “돌봄의 소멸”이다.

자동화시대, 메타버스와 AI시대이지만 돌봄은 사람이 가까이에서 직접 감당하는 일이다. 사람이 사라지면 돌봄도 사라진다.

돌봄이 사라지면 삶도 사라진다. 인구 감소가 가져오는 가장 큰 공포는 지역 자체의 소멸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돌봄의 소멸**이다.



지역소멸과 아동돌봄서비스

3. 지역소멸 현황

1) 지역 인구 감소

특히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의 인구 감소폭이 가팔랐다.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모두 인구가 감소했는데, 그중에서도 **경북(1만6500명), 부산(1만3600명), 경남(1만3400명), 전남(1만3000명)의 순으로 크게 줄었다.**

2) 지방대학소멸

인구는 줄고, 젊은 층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은 공동현상이 심각하고 대학들이 문을 닫고 있다. **문을 닫는 대학들의 기준이 “남쪽 벚꽃이 피는 순서”라는 점**이 문제이다. 비수도권인 소규모 도시의 대학들이 남쪽에 몰려 있어 벚꽃 피는 순서라는 것이다.

지방대학이 어려워진 핵심 키워드는 ‘생산’과 ‘분배’이다. ‘생산’의 문제는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의 문제이고, ‘분배’의 문제는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의 문제이다. 100대 기업의 91%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 모든 인프라와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누가 자발적으로 지방대에 가겠는가?

3) 돌봄 사각지대 발생과 지역 붕괴

어린이집이 매년 1,900곳씩 사라지고 있다. 5년 사이에 9,000여 곳이 폐원하였고, 3만여 곳이 남아있다.

아동 돌봄시설의 급격한 감소는 돌봄 공백지역의 발생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저출생의 악순환, 지역소멸의 원인이 된다. 2021년 전국 3,495개 읍·면·동 가운데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554개로 전체의 15.9%에 달한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한 해에만 총 3,237곳이 폐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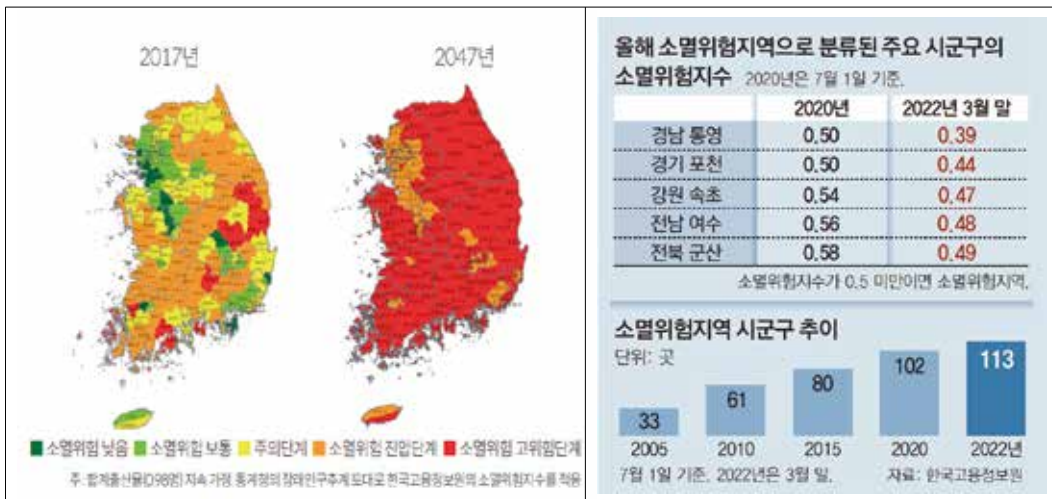
정부는 공공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지역소멸과 아동돌봄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 높은 돌봄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의 아동돌봄서비스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유휴공간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러한 위기상황이기에 지방자치단체는 교회와 종교단체를 활용하여 아동돌봄 확충을 위해 나서야 할 때이다.

4) 소멸위험지역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소멸위기에 해당하는 지역(시·군·구)은 2017년 12곳에서, 2047년 157곳으로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4. 돌봄서비스를 통한 지역소멸 대비

1) 지방자치단체 돌봄정책

지역마다 청년지원정책, 귀촌지원정책, 출산지원정책이 없는 곳이 없다. 그럼에도 인구감소가 더 빨라진 것은 대부분의 정책이 지역 간 인구쟁탈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다. 지역 간 인구경쟁은 누군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제로섬 게임일 뿐이다. 패러다임을 바꿔서 지방소멸을 ‘돌봄소멸’로 인식한다면

지역소멸과 아동돌봄서비스

지방소멸 정책의 초점을 **‘지방’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자체 성공사례(전남 영광군, 강원 화천군) 중 화천군을 소개한다.

2022년 화천군의 합계 출산율은 전국 지자체 중 다섯 번째인 1.4명을 기록했다.

평균 출산 연령(30.3세)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

화천군의 ‘출산율 기적’은

첫째, 함께 키우는 공동체 보육으로 공공산후조리에 가사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둘째, 초·중등생은 방과 후 교육 완비로 맞벌이 부모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

셋째, 공공학습관 운영과 공짜 해외연수까지 시행하여 외지서 고교 입학생이 몰린다.

넷째, 전국 첫 대학생 무상교육 실시이다. SOC 예산을 줄이고, 교육투자를 늘렸다.

2) 지역의 균형발전 개혁

저출생과 수도권집중의 근본적인 원인인 노동시장, 지역의 일자리와 주거, 교육문제를 포함하여 국가의 균형발전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 출산장려운동과 종교단체 영유아돌봄 서비스

영유아 돌봄서비스 확대만으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출생율이 반등하는 지역적 특징을 살펴보면 육아·교육·보육지원 등 서비스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등 4개국은 출산율이 하락하던 시기에 출산을 하면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정책이었는데, 최근에는 사회가 아이를 키워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사회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유인하는 정책이다. 그러기에 영유아 돌봄서비스 확대는 저출생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소멸과 아동돌봄서비스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 돌봄을 제공할 곳이 충분치 않다면 교회와 종교단체가 그 역할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교회가 공부방 선교원 아기학교 등 다양한 시설로 돌봄과 대안적인 교육의 공간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시설들이 법규의 정비와 정부의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사립학교 대안학교 등으로 발전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현재 교회 및 종교시설 내 돌봄서비스와 관련한 법규 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 도출과 관련 법규 개선, 시설비 지원, 보조금 지급을 비롯한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뒤따라야 가능하다. 종교단체가 지자체와 협력해 활용한다면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앞으로의 과제와 비전

지역의 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하기 위해서도 협력해야 한다. 현대는 거버넌스 시대이다. 정부와 지역사회, 기업, 시민단체, 교회가 협력하고 상생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은 환경이 되어야 한다. 국란일 때 독립운동과 계몽운동을 통해 나라를 지켰던 것처럼, 국가와 민족의 생존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운동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인구소멸, 지역소멸, 국가소멸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이 출생장려 운동과 영유아 돌봄서비스에 함께 동참하여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초저출생시대
아동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방안
국회토론회

발행일 2023년 9월 18일
발행인 이채익, 김희재, 감경철, 김진오
발행처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주)기독교텔레비전
제작부서 CTS다음세대운동본부 TEL _ 02.6333.2502
디자인·인쇄 우성프린테크 TEL _ 02.2278.9260

© 2023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초저출생시대 아동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방안 국회토론 자료집>에 수록된 모든 자료는 저작권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필자의 저작물이 아닌 경우 출처를 표기하였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 책자의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 및 재편집 출판, 상업적 활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에 수록된 원고는 저자들의 개인 의견을 서술한 것이므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초저출생시대
아동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방안
국회토론회**

| 주최 |  이채익 국회의원  김희재 국회의원

| 주관 |   www.happyborn.kr